

월간

#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03

2023 March

Vol. 75



나라재정 보기

## FIS 인사이트

돌봄서비스 예산관리체계의 필요성

## 재정칼럼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노인 돌봄 분야 재정지출 현황 및 향후 과제

## 한국 재정사의 현장

2023년 경제전망과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

유일호 전 부총리 인터뷰 ③



# CONTENTS

2023 MARCH

Vol. 75

월간

## 나라재정

###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 전화

02-6908-8200

### 팩스

02-6312-8959

### 홈페이지

[www.fis.kr](http://www.fis.kr)

### 발행인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

### 문의

재정정보분석센터 | 02-6908-8559

### 제작

(주)케이에스센세이션 | 02-761-0031

## 재정 INSIGHT

04

### FIS 인사이트

돌봄서비스 예산관리체계의 필요성

지은초 재정정보분석센터 부연구위원

12

### 재정칼럼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노인 돌봄 분야 재정지출 현황 및 향후 과제

한기명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 재정 NOW

24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32

키워드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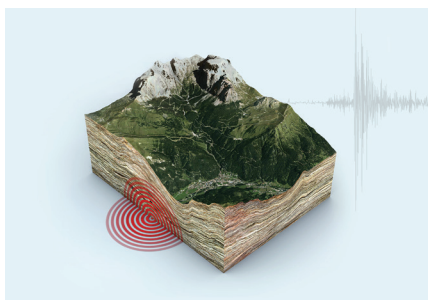
지진

36

해외재정동향

IMF How to Notes

「지출심사제도의 설계 및 제도화 방안」



## 재정 STORY

42

재정원 받은 메일함 열어보기

장애를 딛고 어린 시절

꿈을 찾게 해준 e나라도움

44

이달의 재정 이야기

미래를 위한 교육, 그 든든한 초석을 세우다

교육부 예산담당관

48

재정 방방곡곡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중심이 되다

물의 도시 충주

52

한국 재정사의 현장

2023년 경제전망과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

유일호 전 부총리 인터뷰 ③

56

경제학자가 풀어낸 인문학

채권의 발달은 전쟁 때문이었다

60

재정 캘린더

63

애독자 코너







# Insight





# 돌봄서비스 예산관리체계의 필요성

지은초 재정정보분석센터 부연구위원(anncho@kpfis.or.kr)

## 들어가는 말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 맞벌이 부부의 아동 돌봄 수요 확대 등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돌봄의 개념은 이제 가족 내 활동뿐만 아니라 민간, 국가를 포함해 보다 넓은 ‘사회적 돌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Daly and Lewis, 2000).

정부는 ‘보편적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국정과제의 주요 과제목표 중 하나로 선정했다. 또한 2023년 주요 정책변화에서 돌봄서비스 부분의 확대·개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재정사업의 범위는 사회복지 분야를 넘어 교육, 고용, IT 분야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돌봄서비스의 대상과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 등 돌봄 사업 운영에 대한 이슈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앙부처 사업은 물론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등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효율적인 돌봄서비스의 운영을 위해 예산 규모, 중앙-지방 간 예산흐름, 돌봄서비스 사업의 실행 현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통합적 예산관리체계 확립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돌봄서비스, 사회복지를 넘어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

2023년 사회복지 예산은 206조원으로, 전체 예산 638.7조원(총지출 기준)의 32.2%에 달한다. 흔히,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돌봄서비스의 예산범위는 어디까지로 볼 수 있을까?

돌봄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의 생애 주기에 따라 영유아, 아동·청소년과 함께 노인, 장애인 등 성인을 포함한다. 또한 돌봄서비스의 종류는 서비스 대상자의 사회활동을 돌보는 것 외에도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 서비스 대상자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고용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돌봄서비스는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2월 13일, 기획재정부는 ‘고령화와 돌봄로봇’을 주제로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돌봄로봇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다. 돌봄로봇 분야는 고령화라는 사회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4차 산업의 활성화도 견인할 수 있어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산업, 신산업·신시장 분야로 평가된다. 이렇듯 돌봄서비스 사업의 범위는 사회복지 분야를 넘어 교육, 고용, IT 분야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돌봄서비스의 예산 규모를 단순히 사회복지 분야 내 사업군이라는 단편적인 영역으로만 이해한다면 그 규모와 영향력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2022년에 발표된 120대 국정과제 속 돌봄서비스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이외에 국토부, 농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아낸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서도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정책들이 확대 개편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120대 국정과제 속 돌봄서비스 관련 정책

| 관계부처 | 과제명                          | 내용                                                                                    |
|------|------------------------------|---------------------------------------------------------------------------------------|
| 복지부  |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 혁신                     |
|      |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일자리·건강·돌봄 지원                                             |
|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생 위기 극복 |
|      |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한 뒤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                             |
| 국토부  | 참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입주민의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서비스 제공                                           |
| 농식품부 |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 농어촌 지역 등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복지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2022~) 등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
| 교육부  |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                                                |

자료: 대한민국 정부(2022.7.),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표 2〉 2023년 돌봄서비스 관련 정책변화

| 분야       | 관련부처 | 내용                                                                                                                                          |
|----------|------|---------------------------------------------------------------------------------------------------------------------------------------------|
| 보건·복지·고용 | 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li> <li>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li> <li>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li> </ul> |
|          | 질병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돌봄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li> </ul>                                                                  |
| 교육·보육·가족 | 여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 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li> <li>1인 가구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li> </ul>                                              |

자료: 대한민국 정부(2023),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사회보장 기본평가에서 바라본 돌봄서비스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1,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했다<sup>1</sup>. 특히,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돌봄서비스를 포함해 복지서비스의 이용체계 재정립과 서비스 확대를 추진했다.

〈표 3〉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의 범주

| 영역    | 고용·교육    | 소득         | 건강·의료                   | 돌봄          |
|-------|----------|------------|-------------------------|-------------|
| 주요 정책 | 온종일 돌봄체계 | 기초연금 인상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br>치매국가 책임제 |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
|       | 고교 무상교육  | 국민연금 제도 개선 | 방문의료                    | 치매안심센터      |
|       | 고용보험     | 아동수당       | 재가의료급여                  | 케어안심주택      |
|       | 최저임금     | EITC 확대    | 집중형 방문건강관리              | 케어안내창구      |
|       | 한국형 실업부조 |            | 퇴원 지원 등                 | 지역케어회의      |
|       |          |            |                         | 종합재가센터      |
|       |          |            |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             |

자료: 사회보장위원회(2023.2.19.),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www.ssc.go.kr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2016년부터 교육, 돌봄, 의료지원, 고용, 주거, 생활지원, 생계 등 총 7개 영역의 사회보장제도 사업군을 대상으로 사회보장 기본평가가 실시되었다. 그중 돌봄서비스 분야는 2018년에 기본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돌봄서비스 분야의 평가 대상은 크게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 성인·노인 돌봄 분야로 분류된다.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의 경우 영유아 보육, 아동 돌봄, 아동·청소년 보호가 속해있다. 성인·노인 돌봄 분야의 경우 노인, 장애인 사업군이 포함되어 있다.

〈표 4〉 돌봄 분야 사업의 기본평가 대상

| 분야            | 사업군       | 부문명                                                      |
|---------------|-----------|----------------------------------------------------------|
|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 영유아 보육    | • 영유아 보육                                                 |
|               | 아동 돌봄     | • 아동 돌봄                                                  |
|               | 아동·청소년 보호 | • 요보호 아동·청소년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 학교 밖 위기 아동·청소년        |
| 성인·노인 돌봄      | 노인        | • 장기요양    • 노인 돌봄    • 독거노인<br>• 노인학대, 보호    • 수급자 주거 지원 |
|               | 장애인       | • 장애인 활동 지원    • 가사간병방문 사업    •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            |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18), p.59; 보건복지부·고려대학교(2018), p.67 재정리

<sup>1</sup>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 OECD 사회복지지출 통계에서 살펴본 돌봄서비스

OECD의 사회복지지출 통계 SOCX(Social expenditure Database)<sup>2</sup>는 9개의 정책영역으로 구분된다. SOCX의 정책영역은 돌봄서비스/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등 돌봄서비스와 매칭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SOCX의 정책영역 중 노령, 근로 무능력, 가족 영역에서 돌봄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가사서비스 등을 세부 관심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통계정보 보고서는 각 정책 영역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국내 돌봄서비스 정책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노령 영역의 경우 노인돌봄서비스 정책, 근로 무능력 영역은 장애인 선택적복지, 장애아교육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 정책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가족 영역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밖에 SOCX의 유족, 보건, 기타 정책영역에서도 돌봄서비스로 볼 수 있는 정책이 담겨있다<sup>3</sup>.

〈표 5〉 SOCX의 돌봄서비스 관련 항목 및 내용

| 정책영역      | 세부 관심영역                   | 주요 내용                                                                              |
|-----------|---------------------------|------------------------------------------------------------------------------------|
| 노령        | 돌봄서비스<br>가사보조서비스          | • 돌봄·재활·일자리 등 노인서비스 관련 지출<br>예) 노인돌봄서비스                                            |
| 근로<br>무능력 | 돌봄서비스<br>가사보조서비스<br>재활서비스 | • 장애로 노동시장에 완전 혹은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근로 무능력을 가질 때 지급하는 급여<br>예) 장애인 선택적 복지, 장애아교육 지원   |
| 가족        | 영유아 교육·보육<br>가사서비스        | • 자녀양육 및 기타 부양자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및 가족 관련 서비스 급여<br>예) 아이 돌봄 등 영유아 지원 |

자료: 보건복지부(2019),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통계정보보고서

이처럼 돌봄서비스 사업군의 예산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기본평가, SOCX의 정책영역 등 돌봄 분야 사업군 분류를 포함해 다양한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관련 정책들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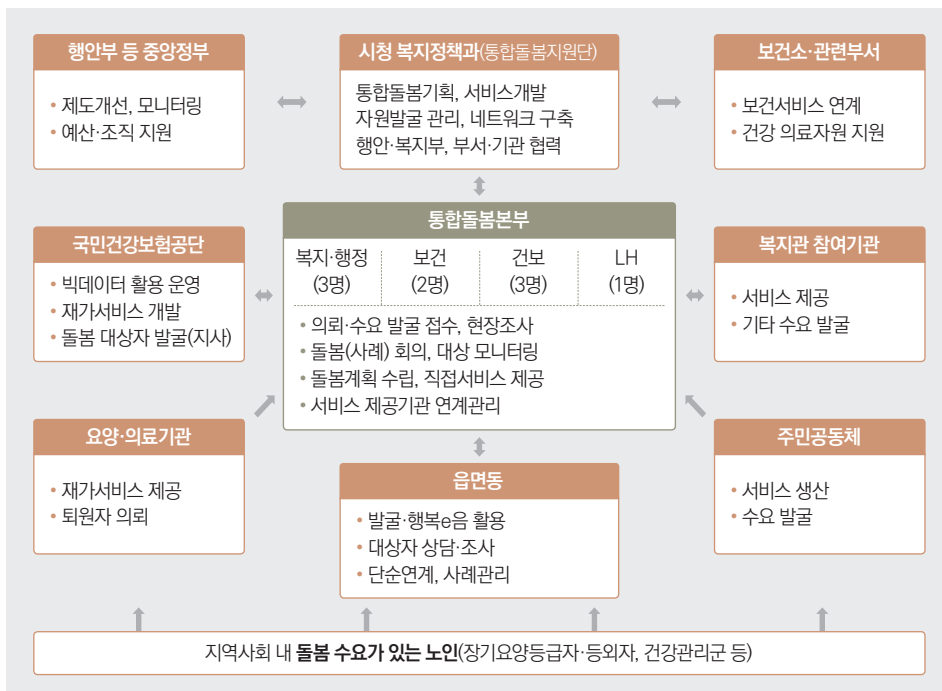
## 돌봄서비스의 예산관리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질적, 양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체계 또는 제도이다(김기현 외, 2013). 수혜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돌봄서비스가 명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결조직, 기관, 시설, 시스템 등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

정부는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20)는 보건 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sup>4</sup>을 실행 중이며, 행정안전부(2022)는 노인 돌봄 전달 체계 개편 시범사업<sup>5</sup>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축 과 함께 예산관리에 대한 내용 또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재가 의료서비스의 확충, 제도 간 연계 강화 등 의료돌봄서비스의 한계 보완과 내실화를 위한 내용을 2023년도 예산 에 반영했다.

〈그림 1〉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노인 통합돌봄)



자료: 행정안전부(2022), 노인 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안내, p.22.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의 보편적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도별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꾸준히 투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5년간 총 투자 규모는 약 332.1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의 범주에서 속하는 건강과 사회서비스의 규모는 약 143.6조원으로 총 투자 규모의 43.2%에 달한다. 돌봄서비

<sup>2</sup>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 ALMP), 실업, 주거, 기타 등 9개의 정책영역과 공공, 법정민간, 자발적민간, 순사회복지지출의 통계자료 제공

<sup>3</sup>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보장 유형 및 범위 명확화에 관한 연구, 〈표 4-7〉, p.82

<sup>4</sup> 보건복지부(2020.5.), 지역 주도의 통합서비스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한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sup>5</sup>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2022.1.), 노인 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안내

스를 포함한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른 사업들은 고령화 등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투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의 연도별 투자 규모

(단위: 조원, %)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계     | %     |
|------------------------|-------|-------|-------|-------|-------|-------|-------|-------|
| 계                      |       | 54.9  | 62.5  | 67.1  | 71.3  | 76.3  | 332.1 | 100.0 |
| 보편적<br>사회<br>안전망<br>구축 | 고용·교육 | 12.4  | 14.1  | 14.1  | 14.1  | 14.2  | 68.9  | 20.7  |
|                        | 소득    | 18.8  | 21.2  | 23.6  | 26.4  | 29.6  | 119.6 | 5.9   |
|                        | 건강    | 5.7   | 6.8   | 7.8   | 8.8   | 9.0   | 38.1  | 11.5  |
|                        | 사회서비스 | 18.0  | 20.4  | 21.6  | 22.0  | 23.5  | 105.5 | 31.8  |

자료: 보건복지부(2019),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사업군 분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기본평가의 체계다. 이렇게 구분된 돌봄서비스 사업은 2018년에 기본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사업의 설계, 투입·집행, 산출 성과, 기타 영향 등 사업 단계별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돌봄서비스의 예산은 평가 단계 중 투입·집행 단계에서 재원의 규모, 배분 및 추진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고, 사업의 성과는 서비스 목표 대비 달성률로 검토해 예산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

한편, 돌봄서비스 사업 전반에 대한 사회보장 기본평가는 2018년에 한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연도별 돌봄서비스의 세부 지출항목, 이월예산액 등 예산관리에 제약이 있고 데이터의 시계열 자료 등을 확보하기 어려워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쉽지 않다. 현재 국정과제에서도 돌봄서비스 사업의 전달체계 개편과 확대가 진행되고 있으나,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달체계에 있어 단계별 예산흐름에 대한 체계 정립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돌봄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돌봄서비스의 예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보장 기본평가 수준의 돌봄서비스 사업 구분과 더불어 고용, IT 분야 등 관련 다부처 정책영역에 있는 사업군에 대한 포괄적인 돌봄서비스 예산 구분이 필요하다. 정부는 돌봄 수요 증가와 돌봄인력의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돌봄로봇 연구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돌봄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지원한다. 이렇듯 새롭게 신설되거나, 확대·개편되고 있는 돌봄서비스의 사업 범위를 추적하고 파악할 수 있다면, 돌봄서비스 재정사업의 예산 흐름에 대한 변화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돌봄서비스 예산의 실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돌봄서비스는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 등 다양한 기관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각 기관 간 돌봄서비스 예산정보 연계가 필수적이다. 돌봄서비스 재정지출 이후의 집행이력을 추적하여, 집행 중 부적절한 사용 여부, 집행지연 등의 부진 사유 등을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돌봄서비스 예산관리체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돌봄사업의 부처별 돌봄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예산정보의 축적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의 제공이다. 따라서 돌봄서비스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혜자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예산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돌봄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바우처 지원, 직접서비스 지원, 현물급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에 따라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관리되어야 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기현 외(2013),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 대한민국 정부(2022.7),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 대한민국 정부(2023),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보건복지부(2019),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통계정보보고서.
- 보건복지부·고려대학교(2018), 사회보장제도 성·노인·돌봄 분야 기본평가.
- 육아정책연구소(2018), 사회보장제도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기본 평가 연구.
- 행정안전부(2022), 노인 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안내.
- Daly and Lewis. (2000).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2): 281-298.
- 사회보장위원회, [www.ssc.go.kr](http://www.ssc.go.kr)





##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인구구조, 인구 이동, 그리고 아동

2020년 공표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은 16.2명, 노년은 24.6명이다. 시·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남, 경북, 강원 등에서 이미 부양비가 120을 초과했다<sup>1</sup>.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사회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유소년부양비가 정점에 달했던 1960년대 우리 사회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도입했다. 학교는 전국 어디서나 보편적인 접근이 가능한 유일한 아동 전달체계며,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확대로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인구의 감소로 이제 학교는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적 돌봄의 제공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한다. 돌봄의 주체(예, 초등돌봄교실) 혹은 공간의 제공자(예, 학교돌봄터)로 보편적인 접근성을 가진 학교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인구 이동 역시 중요한 화두다. 개인의 생애주기 측면에서 인구 이동은 주로 진학과 취업의 시기에 발생한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젊은 인구가 이동하면서 일부 지역은 생산가능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인구가 더 많다. 특히 총부양비가 높은 지역 대부분은 노년부양비가 높고, 노년부양비가 높은 지역은 유소년부양비는 상대적으로 낮다. 자연 상태로 둔다면, 이런 지역에서 아동에 대한 재정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유자녀 가족은 자녀의 돌봄 문제 때문에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이동을 결심하게 된다. 지역사회에서 아동 돌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부모의 욕구에 맞는 아동 돌봄을 제공하면 지역의 정주여건이 향상될 수 있다. 이는 아동발달을 고려한 전문적인 교육과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결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뜻한다.

---

## 아동 돌봄 현황

---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저소득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부모의 퇴근 전까지 혼자 있는 아동이 증가하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던 공부방을 제도화(2004년)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을,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 학교 방과 후에 돌봄을 제공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의 접근성을 활용하여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서 학교와 학교 외(혹은 마을)로 제도는 이원화되었다.

2018년 도입된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은 방과 후 돌봄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을 확대·설치했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돌봄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신설해 보편적인 마을 돌봄 전달체계를 마련했다. 이후에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사업으로 ‘학교돌봄터’ 사업을 신설했다.

---

1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장래인구추계(2020년 기준)」 부양인구비(<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8>).

〈표〉 방과 후 돌봄 추이

| 구분   | 2017년 <sup>1)</sup> | 33만명 | 2021년 <sup>2)</sup>  | 35만명     | 목표(2022년) |      |
|------|---------------------|------|----------------------|----------|-----------|------|
| 학교돌봄 | 초등돌봄교실              | 24만명 | 초등돌봄교실               | 242,776명 | +7만명      | 34만명 |
|      |                     |      | 학교돌봄터                | 1,051명   | +3만명      |      |
| 마을돌봄 | 지역아동센터              | 9만명  | 지역아동센터 <sup>3)</sup> | 82,731명  | +1만명      | 19만명 |
|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 7,270명   |           |      |
|      | -                   | -    | 다함께돌봄센터              | 17,366명  | +9만명      |      |

주: 1) 세부 자료는 제시하지 않음

2) 일부 자료는 운영 개시 전인 시설을 포함

3) 데이터포털은 전체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로 제시되어 있어 아동권리보장원 자료로 초등학생 수를 수정·보완함

자료: 1)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2018),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서울: 경동초등학교)

2) 교육부(2022), 온종일돌봄(초등돌봄) 시설 현황: 행정안전부 데이터포털

3) 아동권리보장원(2023), 2021년 12월 말 기준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온종일 돌봄체계의 성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방과 후 돌봄의 공급량이 확대되었다. 학교돌봄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하면서 1만 8천명이 추가 이용하게 되었다. 학교돌봄 교실 수는 2017년 1만 1천 980실에서 2021년 1만 4천 774실로 증가했고, 마을돌봄 기관 수는 2017년 4천 357개소에서 2021년 4천 836개소로 증가했다(교육부, 2022). 둘째, 온종일 돌봄체계의 구축은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도시 거주 모(母) 고용에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해 2018년 전후에 온종일 돌봄 이용 여부에 모의 고용 상태 변화를 도시와 그 외 지역으로 삼중 차분한 결과이다(강지원 외, 2021). 셋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계기로,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인 '정부24'를 통해 우리 지역의 방과 후 돌봄 기관의 위치와 정원, 현원 등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온종일 돌봄 원스톱서비스가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5년간(2018~2022년) 온종일 돌봄체계에 투입한 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성과는 다소 미흡하다. 먼저,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는 매우 단선적으로 이뤄졌으며<sup>2</sup>, 방과 후 돌봄 수요조사 결과는 공급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돌봄 수요조사의 시점이 수요를 확인한 후 공급량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 방식을 결정하고 공급기관이 이용자를 모집하는 일정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분절적인 전달체계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로 효과가 반감되었다. 예를 들어, 초등돌봄교실을 5시까지 운영하면서 시간대를 달리한 돌봄 중복 이용을 허용했기 때문에, 초등돌봄교실 이용 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수가 증가했다. 이는 방과 후 돌봄을 이용하는 총 이용자는 늘었지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순 이용자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을 뜻한다. 다행스럽게도, 「2023년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설문지」는 상당히

개편되었으므로, 수요조사 결과를 어떻게 공급으로 녹여내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시설별로 대상 선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여 각 시설로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는 돌봄이 필요해도 초등돌봄교실이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으면, 다른 자원과 연계되지 않는다. 또한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오후 5시 혹은 6시까지만 운영돼 대상 선정 기준과 시설 운영 간 정합성이 부족하다.

셋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돌봄을 제공하는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재정 총량과 단위 기관당 비용, 종사자 인건비 등이 명시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시도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 구성되며, 그 외 사업들은 일반회계에 편성된다. 일부 연구에서 방과 후 돌봄의 재정 총량을 추정했으나<sup>3</sup>, 한계가 있다. 문제는 단위 기관당 비용과 종사자 인건비 등의 차이가 서비스 질의 격차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 아동기 사회적 돌봄의 강화

인구구조의 변화는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다.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서부 유럽에서도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는 사회가 함께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이런 이유로 세계 각국은 아동기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과 사회적 돌봄을 결합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부모와 애착을 형성할 시간을 제공하는 일-가족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거나, 저소득·다문화·장애 등 돌봄이 더 필요한 아동에게 더 두텁게 돌봄을 제공하도록 제도를 설계한다.

아동은 음식을 직접 조리할 수 없고,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병·의원에 갈 수도 없다. 부모와 다른 성인으로부터 유기와 방임, 학대를 받아도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아동에게 보호와 돌봄은 분리되지 않으며, 돌봄은 생존과도 직결된다. 아동 한 명 한 명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회적 돌봄(아동돌봄안전망)이 필요한 이유이다.

2 일반 문항으로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온종일 돌봄에 대한 인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설문 문항으로는 돌봄서비스의 필요(q-1), 필요하지 않은 이유(q-1-1), 수업 시간 전후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q-2), 돌봄서비스 유형(q-3), 가구 유형(q-4)으로 구성된다.

3 김우림(2021).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지원(보통교부금)을 '기준재정수요'에 근거하여 수입을 산정했다. 강지원 외(2021). 보육·돌봄체계 중장기 개편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를 활용하여 온종일 돌봄체계 사업별 예산을 2018년 5,014억원(결산), 2019년 5,997억원(결산), 2020년 6,107억원(예산), 2021년 6,115억원(예산)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 자료는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의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아동돌봄안전망은 네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전환해 일하는 사람이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과거에는 ‘유자녀 가족(본인)’이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는데 초점이 있다면, 이제 모든 사회구성원이 ‘유자녀 가족(타인)’의 일-가족생활 양립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하면, 영아기에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유아기에는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돌봄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학교생활과 단체 생활의 적응을 위해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필요한 때 시설 돌봄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돌봄안전망의 기본 단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는 ‘육아휴직과 부모급여’,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지원’의 확대에 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제공기관의 확충은 여전히 중요하다.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까지는 필요한 모든 아동이 방과 후 돌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과 후 돌봄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공급이 계획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방과 후 돌봄의 수요인원 대비 공급률은 44.3%인데, 이를 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별 격차(3.5~201.7%)도 조정해야 한다. 어떤 시설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혹은 과잉 공급 지역에서 돌봄 기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과 지역의 공급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 단위에서 유연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아동이 돌봄 기관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가정에서 자녀를 주로 돌보고 있으나, 다른 자녀가 어리거나 아픈 경우 일시적으로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간제 돌봄을 이용할 수도 있다. 유사하게, 가정에서 자녀를 전담으로 돌보기를 원하지만,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은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내 거점 시설이 오픈 클래스를 개최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정기적으로 맞춤형 방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필요에 따라 일시 돌봄이나 프로그램 지원 등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아동돌봄안전망의 핵심은 지역사회다. 이는 지역 내 모든 아동의 돌봄 수요와 돌봄 선호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아동과 부모가 돌봄이 필요할 때,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돌봄 수요를 기반으로 편성된 예산은 돌봄 공급의 총량을 고려하여 정액 배정할 수도 있지만, 돌봄 제공 시간(오후형, 종일형)과 프로그램 수준(돌봄형, 종합형)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할 수도 있다. 유사하게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방식도 운영비와 인건비, 교재교구비는 시간당 단위 비용을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고, 돌봄 시간을 확대하는 시설에 대한 인건비는 종사자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종사자의 인건비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시설별로 엄격한 설치 기준과 시설별 대상 선정 기준은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아동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과 아동 인구가 분산된 산간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읍·면·동 당 1개소씩 설치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추가 설치하는 시설은 기존의 전달체계와 공간적 중첩성은 최대한 지양하고 사각지대를 메우는 시간과 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 인구가 일정 수준 이하(예, 1,000명 이하)이거나 최근 급격하게 감소한 지역(예, 3개년 평균 감소율이 10% 이상)에서는 최소한의 아동돌봄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즉, 아동기 필수 서비스로써 아동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도 시설이 운영돼야 한다는 의미로, 이런 경우에는 아동 수에 따른 운영비 지원 방식이나 정원 미충족 시 운영비 감액 등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글은 필자가 2022년 The Public News '학술N'에 기고한 글과 '강지원 외(2021). 보육·돌봄체계 중장기 개편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대폭 확장한 것입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노인 돌봄 분야 재정지출 현황 및 향후 과제

한기명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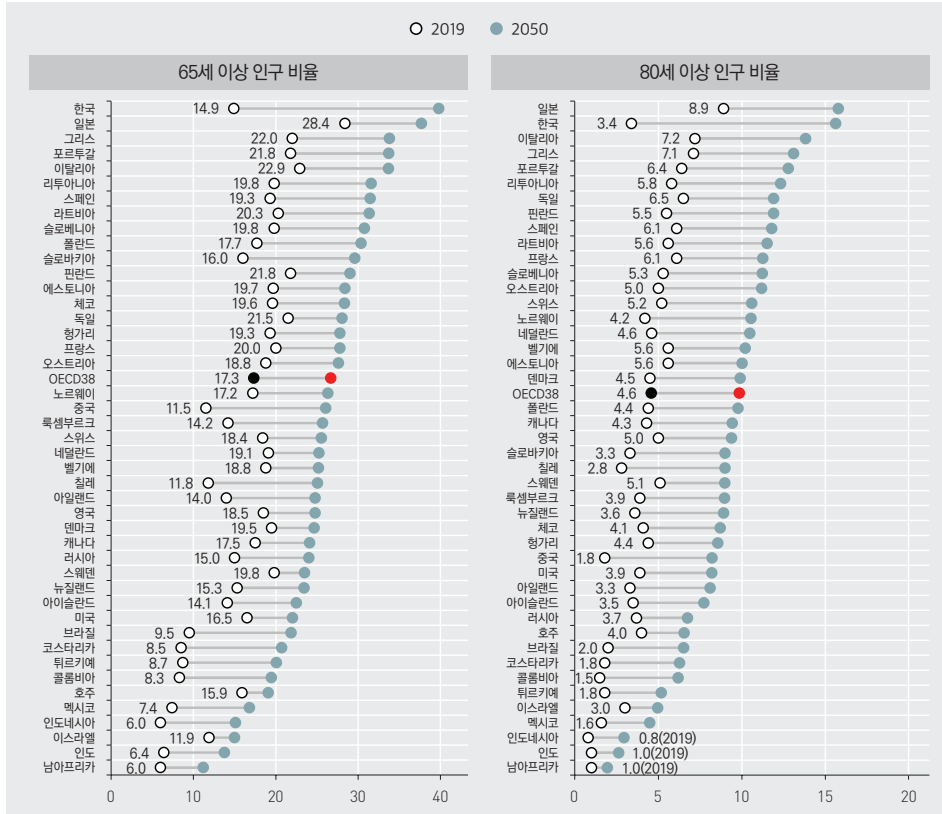


### 1. 들어가며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중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2년 후에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선다(장래인구추계, 통계청). 단순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OECD 38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과 2050년의 격차는 우리나라가 가장 크다. 또한 2050년에는 현재 수준에서 2배로 급증하여 전 세계에서 노인 인구가 많은 국가로 기록될 전망이며, 돌봄 욕구가 증가하는 80세 이상 인구 비율 또한 1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 OECD 38개국의 65세 및 80세 이상 인구 비율(2019, 2050년)

(단위: %)



자료: OECD(2021), Health at a Glance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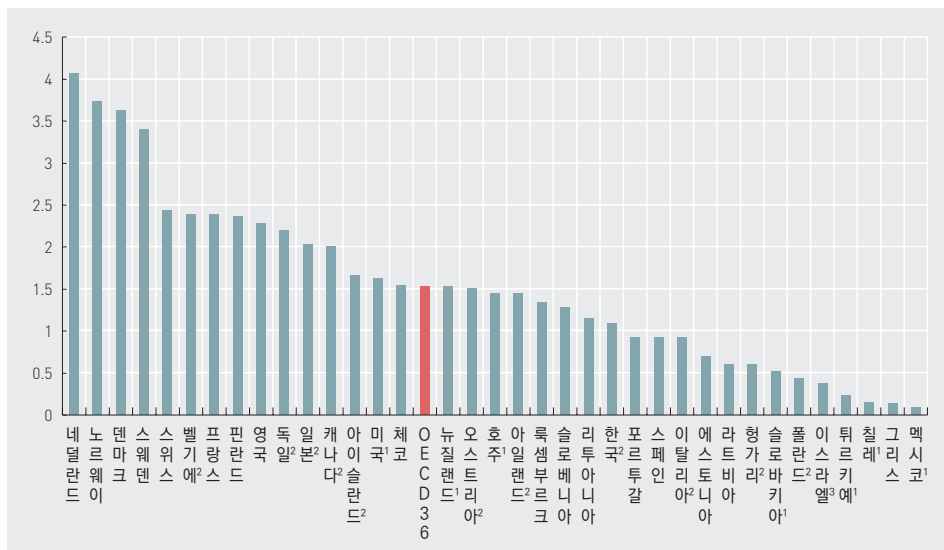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에 대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202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복지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25.1% 수준으로 약 23.5조원이다(보건복지부, 2022). 이는 전년 대비 11.3% 증가했으나,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 증가로 인한 자연증가분과 물가 상승을 반영한 기준연금액 인상에 기인한다(최혜지, 2022). 즉, 보편적인 성격을 띠는 현금 급여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관련 예산이 80%를 차지하게 되면서 노인 돌봄이나 보호(학대 예방 및 지원), 고용, 사회참여와 관련한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 분야 재정지출은 조세 방식(일반회계)보다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Pay as you go)으로 이루어지는 비중이 97.2%로 가장 높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2a, 2022b). 따라서 다음 절에서 다루어지는 국가별 노인 돌봄 분야 재정지출 현황에서는 국가별 장기요양서비스의 범주나 예산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국가별 노인 돌봄 분야 재정지출 현황

이 글에서는 국가별 노인 돌봄 분야 재정지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OECD에서 발행한 보건 분야 자료를 활용했다(OECD, 2021). 해당 자료를 살펴보기에 앞서 노인돌봄서비스의 범주를 살펴보면, 크게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신체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고령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서비스와 노인의 자택 또는 가까운 센터에서 제한된 시간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로 구분된다. 또한 일상생활의 제한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의료서비스)와 일상적인 가사활동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요양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노인돌봄서비스의 범주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여 재정 운영을 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 정도가 별도의 보험제도를 통해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의료서비스 영역의 포함 여부나 정도에 따라 노인 돌봄 분야의 지출이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가정 내에서 비공식적인 돌봄(Informal Care)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외되기 때문에 과소 집계 가능성도 크다. OECD는 각 국가의 자료 분류 방식에 따라 제출된 노인돌봄서비스(장기요양서비스)의 지출 수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OECD, 2021). 아래 <그림 2>는 거시적 관점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기요양 지출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2> 2019년 기준 GDP 대비 장기요양 분야 지출 비중(Long-term care spending)

(단위: %)



주 1) 1. OECD에서 추정한 수치 2. 사회적 돌봄에 대한 지출을 보고하지 않는 국가.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적 돌봄이 총지출에서 제외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부분적으로 포함하기도 함 3. 의료기능을 포함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보고하지 않는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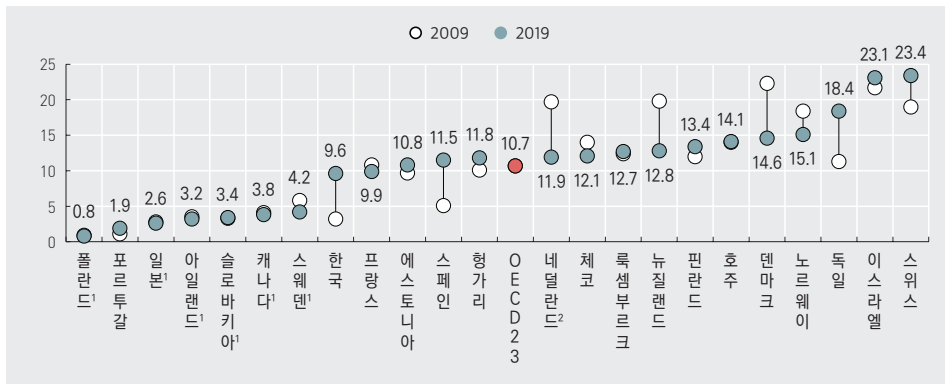
2) 한국의 경우 요양병원 급여비와 일반회계를 제외한 장기요양보험 급여비만 포함함

자료: OECD(2021), Health at a Glance 2021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분야 지출 수준은 OECD 36개국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유사하게 사회보험 방식으로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자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 <그림 3>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09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9.6%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23개국의 평균보다 낮고, 독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고령화를 우리나라보다 이르게 경험한 일본(2.6%)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그림 3>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2009, 2019년)

(단위: %)



주: 1. 시설서비스 수급자만 포함된 수치 2. 2018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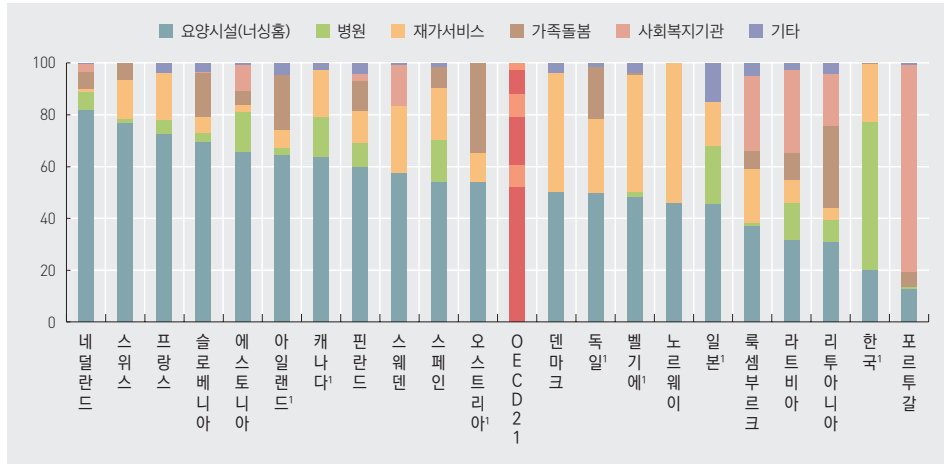
자료: OECD(2021), Health at a Glance 2021





〈그림 4〉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별 지출 비중(2019년 기준)

(단위: %)



주: 1.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 중 사회복지기관이 제외된 국가

자료: OECD(2021), Health at a Glance 2021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별로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그림 4〉), 대부분의 국가들이 요양시설(Nursing home)에 해당하는 비중이 가장 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병원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이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의 비중이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또한 병원을 통한 노인돌봄서비스의 제공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3. 나가며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합계출산율은 0.88명(2023년)으로 가장 낮다. 즉, 노인을 부양할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돌봄 욕구가 큰 노인의 수는 이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대비하여 현재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의료적 욕구가 있지 않으나,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을 줄이는 등 비효율적 재정 지원은 적극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요양병상수의 해외동향을 살펴보면 10년 전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OECD, 2021).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병원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내가 거주하던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커뮤니티케어)’,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퇴원환자 지원 사업’, ‘의료-요양-돌봄 간

통합판정체계 도입' 등 병원 입원을 감소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료 부과방식이 노인뿐 아니라 전체 국민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제도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결과에 대한 전 국민적인 홍보와 정확한 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투명한 운영, 높은 수준의 돌봄서비스 질을 통한 부양가족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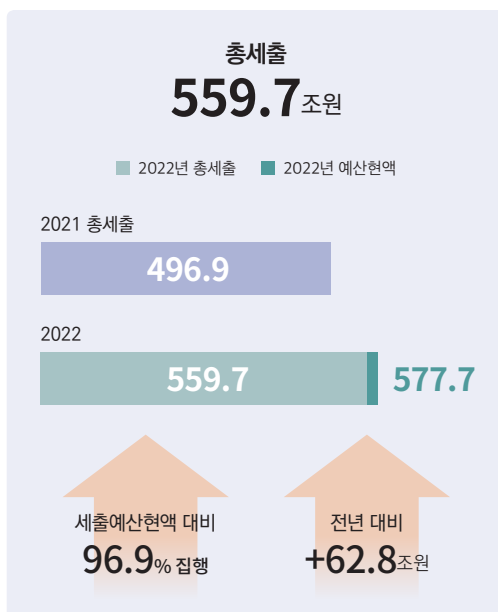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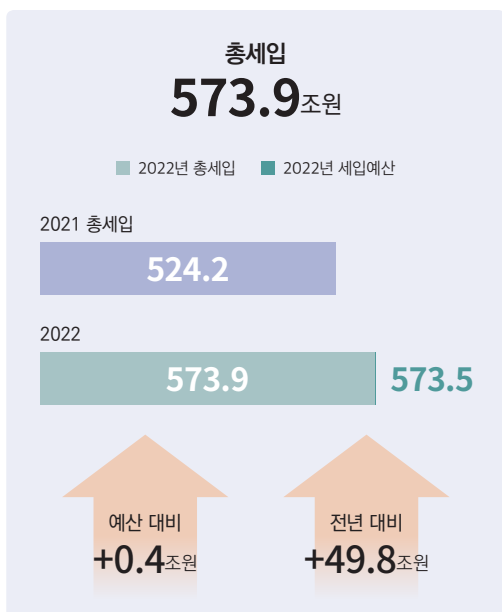
- 국민건강보험공단(2022a),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2022b),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2022), 202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개요(세종: 보건복지부).
- 최혜지, (2022). 2023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 노인복지 분야. 월간복지동향 2022년 기획 6(서울: 참여연대).
- 통계청(2022), 장래인구추계(대전: 통계청).
- OECD(2021), Health at a Glance 2021. OECD Publishing, Paris. URL: <https://www.oecd.org/health/health-at-a-glance>

## 이달의 재정통계 FOCUS

### 주요 내용

지난 2월 10일 기획재정부는 2022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총세입과 총세출 주요 실적 및 추이를 살펴본다.

###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 이월



#### 불용



#### 세계잉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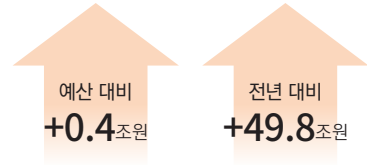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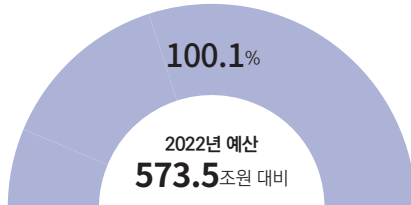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2.10.)

## 총세입

2022회계연도 기준

총세입  
**573.9**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2.10.)

일반회계  
**493.9**조원



전년 대비  
**+55.5**조원

예산 대비  
**-1.3**조원

특별회계  
**80.1**조원



전년 대비  
**-5.7**조원

예산 대비  
**+1.8**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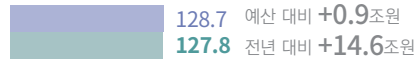
■ 결산 ■ 예산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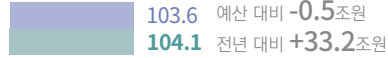
총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예산 대비 -0.7조원  
전년 대비 +51.9조원

## 2022회계연도 총세입 현황

(단위: 조원)

|         | 2021년 결산 | 2022년 |       | 증감액   |       |
|---------|----------|-------|-------|-------|-------|
|         |          | 예산    | 결산    | 전년 대비 | 예산 대비 |
| 국세수입 ①  | 344.1    | 396.6 | 395.9 | 51.9  | -0.7  |
| - 일반회계  | 332.5    | 386.2 | 385.2 | 52.7  | -1.1  |
| - 특별회계  | 11.6     | 10.4  | 10.8  | -0.8  | 0.4   |
| 세외수입 ②  | 180.1    | 176.9 | 178.0 | -2.1  | 1.1   |
| - 일반회계  | 105.9    | 109.0 | 108.7 | 2.8   | -0.3  |
| - 특별회계  | 74.2     | 67.9  | 69.3  | -4.9  | 1.4   |
| 총세입 ①+② | 524.2    | 573.5 | 573.9 | 49.8  | 0.4   |

주: 구성 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순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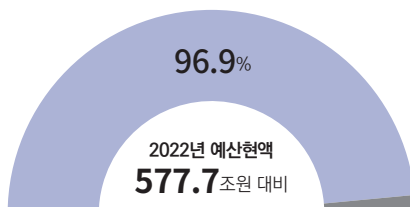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2.10.)

## 총세출

2022회계연도 기준

총세출

559.7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2.10.)

(단위: 조원, %)

|      | 예산액<br>(A) | + | 전년도 이월액<br>(B) | + | 초과지출<br>승인액 등(C) | = | 예산현액<br>(D=A+B+C) | 지출액<br>(E) | 집행률<br>(E/D) |
|------|------------|---|----------------|---|------------------|---|-------------------|------------|--------------|
| 합 계  | 573.5      |   | 4.0            |   | 0.2              |   | 577.7             | 559.7      | 96.9         |
| 일반회계 | 495.2      |   | 2.6            |   | 0.0              |   | 497.9             | 485.0      | 97.4         |
| 특별회계 | 78.3       |   | 1.3            |   | 0.2              |   | 79.8              | 74.7       | 93.6         |

## 2022회계연도 총세출 현황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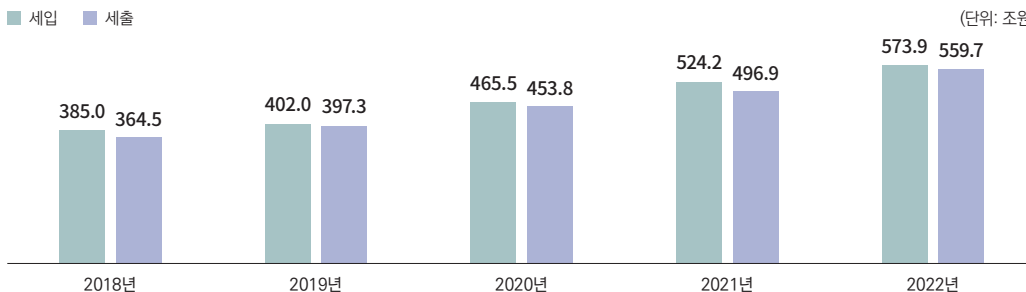
|           | 2021년 결산 | 2022년 |       | 전년 대비 증감 |
|-----------|----------|-------|-------|----------|
|           |          | 예산    | 결산    |          |
| 일반회계 (①)  | 417.7    | 495.2 | 485.0 | 67.3     |
| 특별회계 (②)  | 79.1     | 78.3  | 74.7  | -4.4     |
| 총세출 (①+②) | 496.9    | 573.5 | 559.7 | 62.8     |

주: 구성 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2.10.)

## 최근 5년 세입·세출 마감 현황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2.10.), 각 연도



## 이월 · 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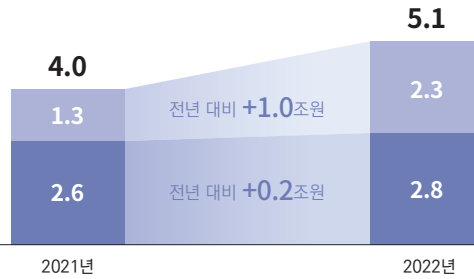
2022회계연도 기준

이월

5.1조원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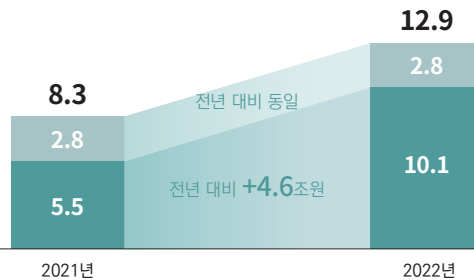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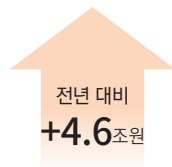
주: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예외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2.10.)

불용

12.9조원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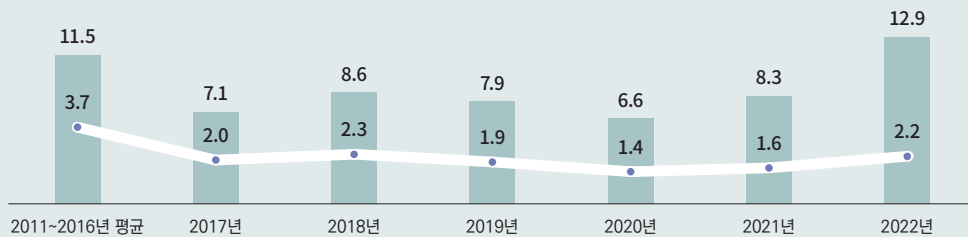


주: 불용액은 예산현액(577.7조원)에서 총세출(559.7조원)과 이월(5.1조원)을 제외한 수치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2.10.)

## 연도별 불용 규모

■ 불용액 ● 불용률

(단위: 조원, %)



주: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2.10.)

세계잉여금

2022회계연도 기준

세계잉여금  
9.1조원



일반회계  
6.0조원



전년 대비  
-12.0조원

특별회계  
3.1조원



전년 대비  
-2.2조원

세계잉여금의 처리

- ① 일반회계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오른쪽 순으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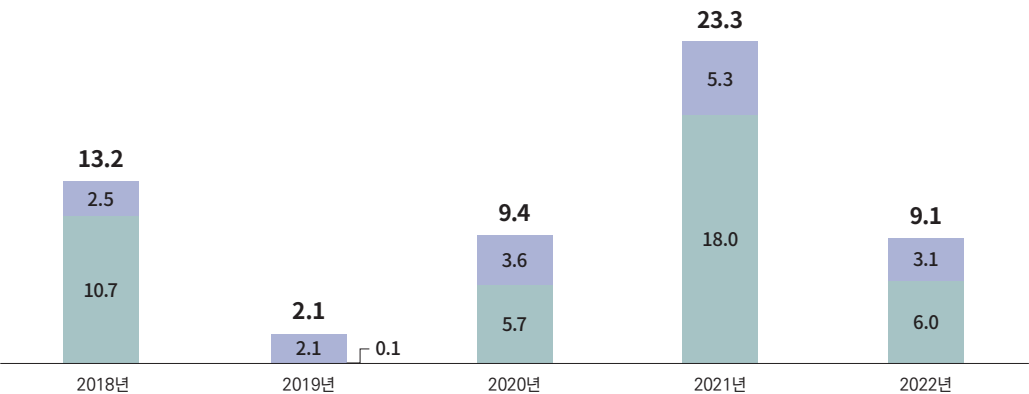
- ②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근거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조치 예정

주: 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총세입-총세출)에서 차년도 이월액 등을 차감한 수치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2.10.)

최근 5년 세계잉여금 규모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2.10.)



# 2022년 12월 기준 재정동향

우수연 재정정보분석센터 연구원(suyeon0520@kpfis.or.kr)

## 국유재산 규모

1,385.1조원

행정재산  
1,014.4조원  
73.2%

일반재산  
370.7조원  
26.8%

## 국유재산 수입

3,550억원

매각대  
3,164억원  
8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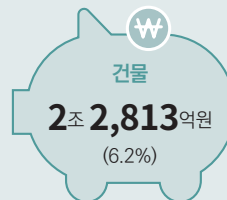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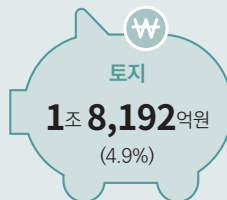
대여료  
275억원  
7.7%

변상금  
111억원  
3.1%

## 국유재산 취득

36조 8,168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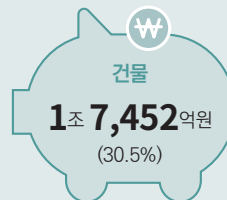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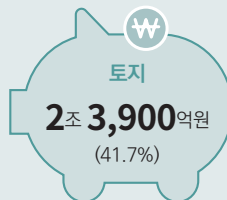
국가가 매수, 교환 등을 통해  
자산상의 순증을 가져오는 행위



## 국유재산 처분

5조 7,299억원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행위



\* '2022년 12월 기준 재정동향'은 기획재정부 「월간재정 동향 및 이슈」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국유재산의 관리정보는 e나라재산 「국유재산 포털」([www.k-pis.go.kr](http://www.k-pi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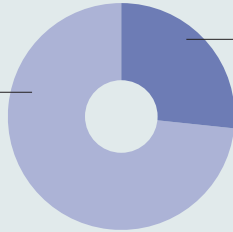
### 국유재산

국유재산

**1,385.1**조원

전년 동기 대비  
**+142.4**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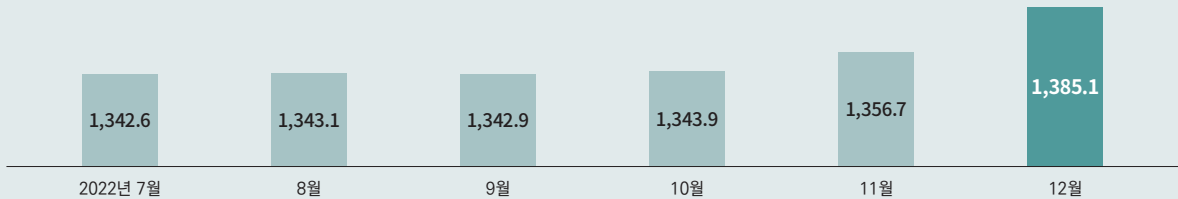
행정재산  
**1,014.4**조원  
73.2%



일반재산  
**370.7**조원  
26.8%



(단위: 조원)



주: 잠정치

### 국유재산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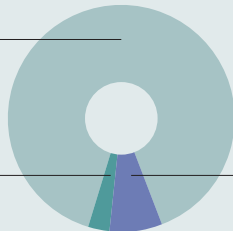
국유재산 수입

**3,550**억원

전년 동기 대비  
**+970**억원

매각대  
**3,164**억원  
89.1%

변상금  
**111**억원  
3.1%



대여료  
**275**억원  
7.7%

토지, 건물 등  
**1,302**억원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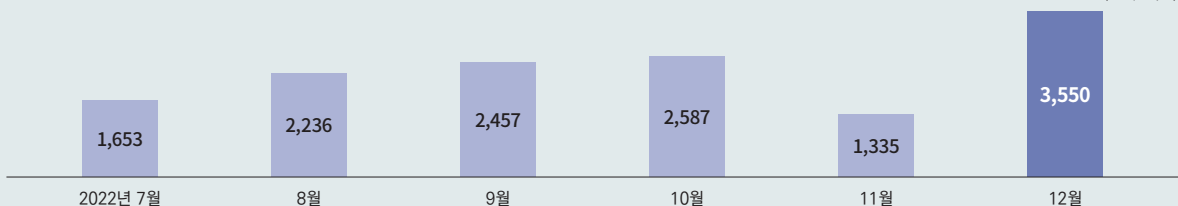
재고자산  
**1,856**억원  
58.7%

기타고정자산  
**5**억원  
0.2%



- 주 1) 매각대: 일반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수납한 대금  
2) 변상금: 사용허가·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  
3)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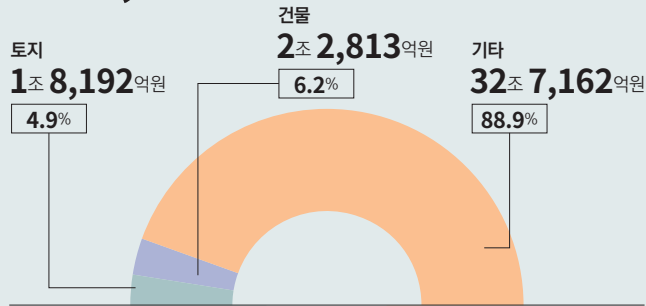


주: 잠정치

## 국유재산 취득·처분

### 국유재산 취득

36조 8,168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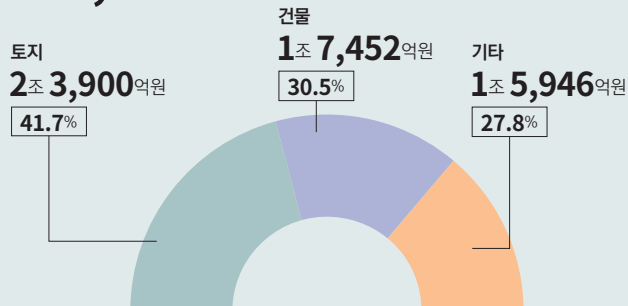
(단위: 억원)

|    | 매매             | 교환(%)        | 기타(%)         |
|----|----------------|--------------|---------------|
| 합계 | 345,982(100.0) | 1,294(100.0) | 20,892(100.0) |
| 토지 | 3,478(1.0)     | 1,293(99.9)  | 13,421(64.2)  |
| 건물 | 18,248(5.3)    | -            | 4,565(21.9)   |
| 기타 | 324,256(93.7)  | -            | 2,906(13.9)   |

주 1)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 잠정치

### 국유재산 처분

5조 7,299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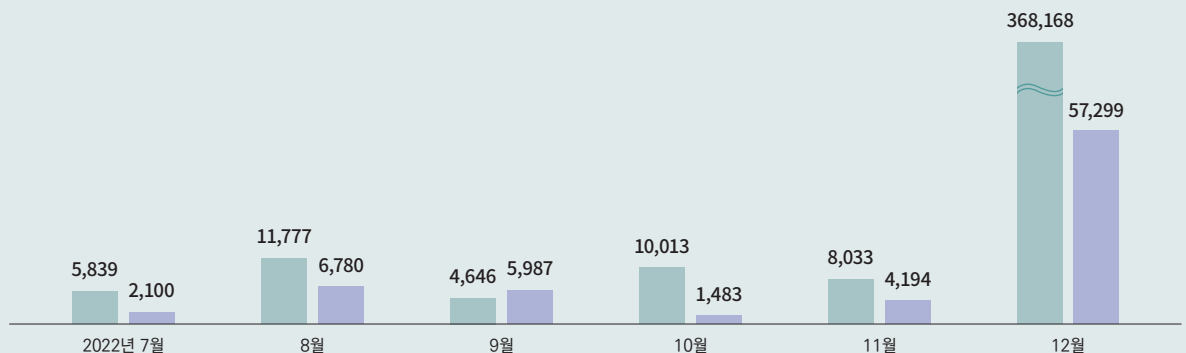
(단위: 억원)

|    | 매매           | 교환(%)        | 기타(%)         |
|----|--------------|--------------|---------------|
| 합계 | 8,411(100.0) | 1,270(100.0) | 47,619(100.0) |
| 토지 | 1,352(16.1)  | 1,270(100.0) | 21,278(44.7)  |
| 건물 | 0(0.0)       | -            | 17,452(36.6)  |
| 기타 | 7,058(83.9)  | -            | 8,888(18.7)   |

주 1)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 잠정치

■ 취득 ■ 처분

(단위: 억원)



주: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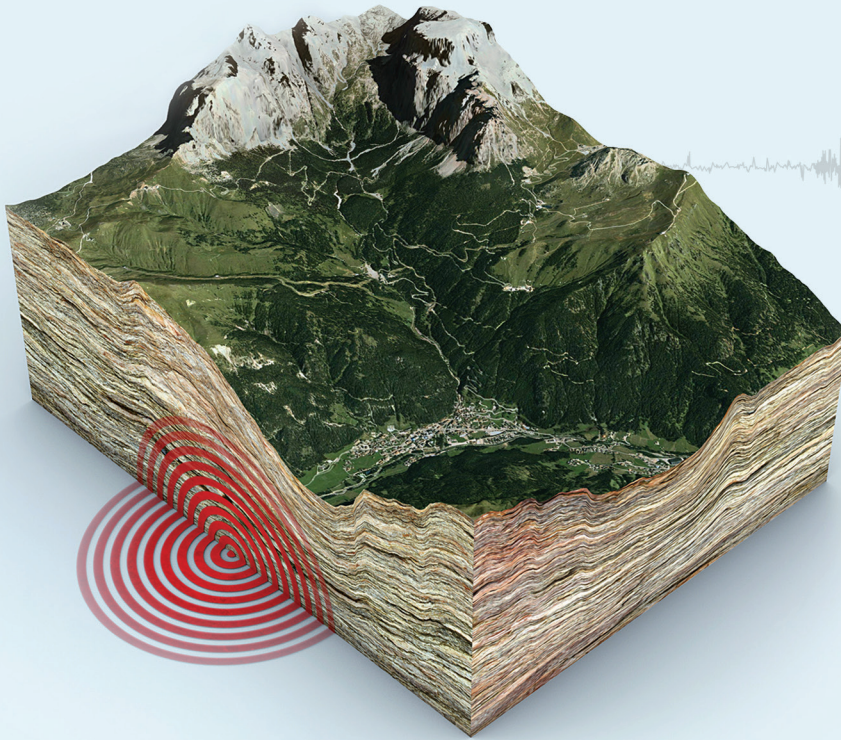


# 지진

이달의 이슈키워드



지진 기업 자본시장 빅데이터 부동산 학교  
대출 금리 대학 학생 카드 바다 한복 이란



지난 2월 튀르키예<sup>1</sup> 동남부에 위치한 가지안테프에 지진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줬다. 또한, 같은 달 충북 보은, 전남 고흥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한달간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정부 여론 및 키워드 분석시스템에 '지진' 관련 언급량이 크게 상승했다. 이에 지진과 관련하여 '지진피해', '긴급구호', '피해복구' 등의 연관 키워드 검색량이 증가하는 등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국민을 지키는 정부의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서영훈 재정정보분석센터 연구원(youngseu@kpfis.or.kr)

|      |   |      |   |
|------|---|------|---|
| 지진피해 | × | 긴급구호 | × |
| 피해복구 | × | 터키   | × |
| 시리아  | × | 발생   | × |
| 사망자  | × | 강진   | × |
| 지원   | × | 여진   | × |
| 붕괴   | × | 대원   | × |
| 사망   | × | 건물붕괴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행정안전부 해안시스템,  
통계청 뉴스기반통계검색서비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등 키워드 재구성(2023.2.9.)  
수집기간: 2023.1.9.~2.8.

지난 2월 6일 오전 4시 17분 튀르키예에서 규모 7.8의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4만명 이상의 사망자와 11만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sup>2</sup>. 튀르키예 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 세계 65개 이상의 국가에서 구조 전문 인력을 튀르키예로 급파했다. 우리 정부 또한 지진 발생 당일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조사단을 튀르키예 현지로 파견했다. 뿐만 아니라, 「민관합동 해외긴급구조협의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2월 8일에 파견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는 외교부, 소방청, KOICA, 국방부 등 수색·구조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약 110명을 파견했다. 지진 발생 9일째 되는 시점인 2월 15일 정부는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지진 피해 및 복구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2진 파견과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구호대는 21명으로 1진에 비해 줄었지만, 텐트 총 1,030동, 담요 3,260장, 침낭 2,200장 등을 추가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을 계기로 국내 지진 발생 상황 대응을 위해 「지진방재 정책 긴급회의」를 지난 2월 9일 개최했다. 회의에선 국내 건축물 내진 반영 실태, 지진 대응훈련 등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의 후속 조치로는 재난 관리 단계별 지진 방재 추진 정책 및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규모 지진 발생 상황에 대비해 선진국 수준의 지진 대응력을 가진다는 계획이다.

지진은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데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내륙지역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 이로 인해 많은 재산, 인명 피해를 일으킨다. 대표적으로 2016년 경주 지진(규모 5.8), 2017년 포항 지진(규모 5.4), 2022년 괴산 지진(규모 4.1) 등 큰 규모의 지진이 내륙지역에서 일어났다(최근 10년간 지역특성별 지진 발생빈도 그래프 참조).

### 지진 관련 주요 재정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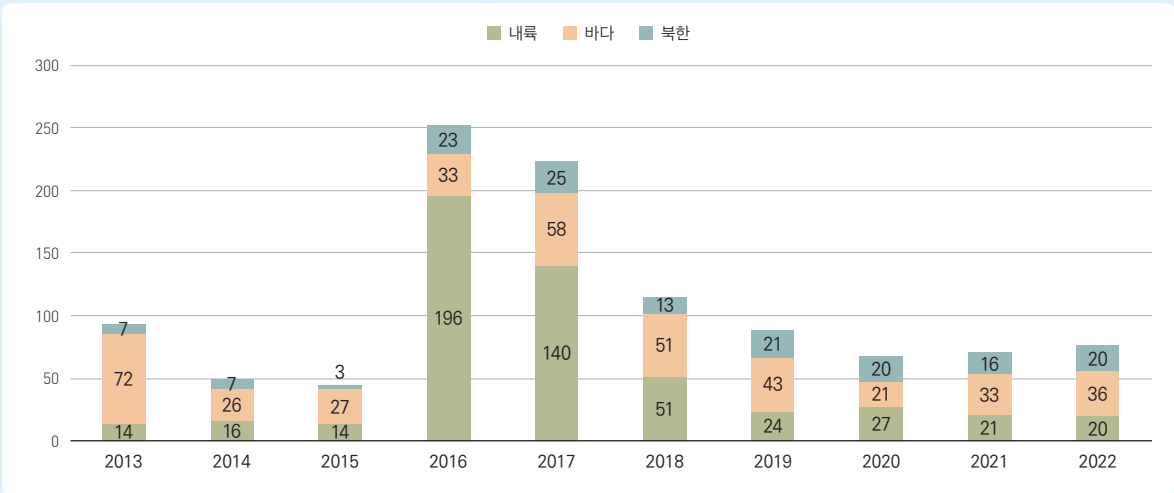
정부는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이를 위해, 지진의 감시, 정보제공, 기술개발, 피해 국민 지원 등 다양한 재정사업을 진행 중이다.

<sup>1</sup> 튀르키예(Türkiye)는 과거 터키(Turkey)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2022년 UN에 자국의 영어 표기를 Turkey에서 Türkiye로 변경을 요청했다. 이후 우리나라에도 국명 표기 변경을 요청하여 튀르키예로 표기한다.

<sup>2</sup> 2023.2.15. 기준.

최근 10년간 지역특성별 지진 발생빈도

(단위: 건)



주: 규모 2 이상 지진 빈도  
자료: 기상청(2022), 「2022 지진연보」 재구성

지진 관련 주요 재정사업 예산

(단위: 억원)

| 소관    | 관련 사업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기상청   | 지진관측망 확충 및 운영(지진 감시)                     | 83.8  | 129.9 | 72.5  |
|       |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제공)                  | 51.7  | 49.4  | 45.3  |
|       | 기상-지진 See-At 기술 <sup>3</sup> 개발 연구(기술개발) | 25.4  | 24.5  | 15.0  |
| 보건복지부 |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피해 지원)                  | 17.3  | 47.4  | 54.7  |

자료: 열린재정(2023), 「사업예산 시계열」 재구성

지진관측망 확충 및 운영

정부는 국가 지진관측망을 확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3년 지진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에 72.5억원을 편성했다. 지진관측망은 국내에 설치된 지진관측소 286개소와 79개의 유관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지진 관측과 경보를 통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진 관측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고품질의 지질 관측 자료를 생산하는 등 지진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해당 사업은 크게 △지진관측망 확충 및 운영 △지진관측망 유지관리 등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첫째, 지진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은 고해상도 지진관

측망 확충, 지진·화산활동 집중감시망 구축, 지진관측 장비 점검 등을 목표로 한다. 둘째, 지진관측망 유지관리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286개소의 지진관측소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이다.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 경보 전달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45.3억원을 편성했다.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예측이 어려운 지진 발생에 대비하고 지진 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지진파<sup>4</sup> 중 전

파속도가 빠르고 피해가 적은 P파를 감지하고 경보한다. 그 후, P파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큰 피해를 주는 S파의 도달까지의 시간을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해당 사업은 크게 △지진경보시스템 고도화 △지진정보 전파체계 강화 △지진화산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지진정보를 파악하고, 경보하는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한다.

###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 연구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 연구 사업은 기상관측, 기상예보, 지진화산 등의 관측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3년 15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기상, 지진 분야의 기초·원천 기술을 개발해 자연재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기상관측 기술은 3차원 관측 기법 및 관측 자료 품질 향상 및 분석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기상예보 기술 사업은 위험 기상 감시, 메커니

즘 분석 및 예측 기술을 개발한다. 지진화산 기술은 지진 조기경보 및 관측 분석기술, 지진·화산·지구 물리 등의 융복합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정부는 지진 예방 못지않게 사후 피해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다.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는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피해 대책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3년 지난해 대비 7.3억원 증액한 54.7억원을 편성했다. 지진 트라우마로 인한 증상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트라우마의 치유, 예방, 관리 등을 위해 운영된다. 사업은 크게 △맞춤형 트라우마 회복 지원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 △지역 사회 연대 강화 △지진 트라우마 대응 전문 역량 강화 등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포항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3 See+Atmosphere 기술의 약자로 기상, 지진 등을 관측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4 지진파는 지진이 발생할 때 생긴 진동이 사방으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진파는 P파와 S파가 있는데, P파(Primary Wave)는 파의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진동한다. 속도는 7~8km로 빠르다. S파(Secondary Wave)는 파의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진동하며, 속도는 3~4km로 느리다.





## IMF How to Notes

# 「지출심사제도의 설계 및 제도화 방안」

김도일 재정정보분석센터 연구원(doylek@kpf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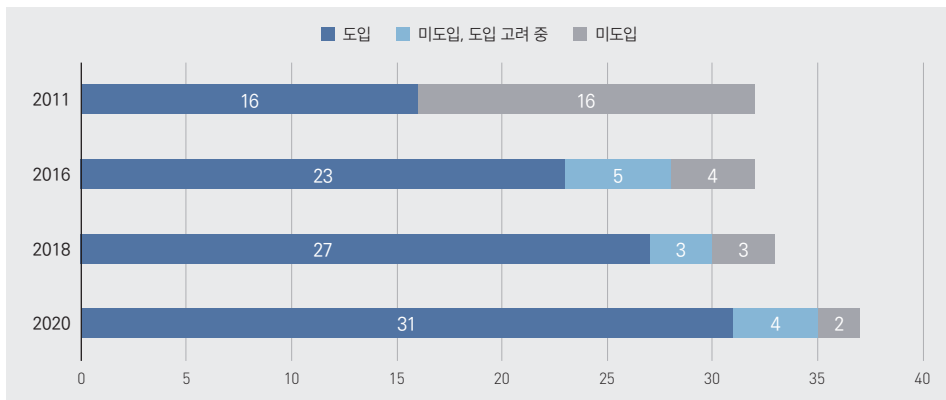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은 주요 이슈에 대하여 정책입안자에게 실용적 조언을 제공하는 비정기 간행물인 'HOW TO NOTE' 시리즈를 발행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지출심사제도의 설계 및 제도화 방안(How to Design and Institutionalize Spending Review)」을 소개한다.

## 지출심사제도의 정의 및 유형

지출심사제도(Spending Review)는 기존 재정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가 낮고, 비효율적이거나, 비효과적인 재정지출을 줄이고 재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Robinson 2014; Vandierendonck 2014). 2020년 기준, 많은 선진국들이 주요 재정관리 제도로 지출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OECD 국가의 3/4 이상이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지출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중간소득국가 또는 신흥국들도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동 제도를 도입 중이다.

〈그림 1〉 OECD 국가의 지출심사제도(2011~2020년)

(단위: 국가 수)



자료: IMF(2022), 'How to Design and Institutionalize Spending Review', 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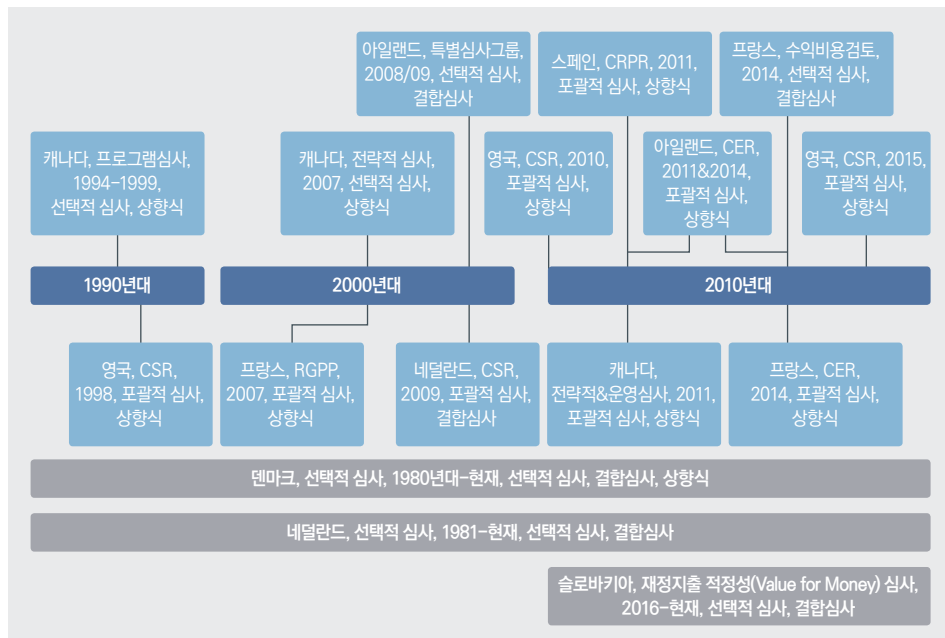
지출심사는 건전재정, 재정 여력 확보, 지출 우선순위 재설정, 재정지출의 적정성 관리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설계가 가능한 유연한 정책도구로, 심사 범위에 따라 선택적 지출심사와 포괄적 지출심사로 구분된다. 선택적 지출심사(Targeted or Selective Spending Review)<sup>1</sup>는 구체적인 주제에 한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특정 정부부처나 기관의 지출이나 기후 관련 지출과 같이 특정한 정책목표와 관련된 재정사업에 대해 검토하는 방식이다. 반면 포괄적 지출심사(Comprehensive Spending Review)는 특정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 모든 재정사업을 검토한다. 단 CER(Comprehensive Expenditure Review), CSR(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CRPR(Comprehensive Review of Public Resources), GRPP(General Review of Public Policies) 등 나라마다 사용하는 용어는 서로 다르다. 지출심사 범위를 선택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할 것인지에

<sup>1</sup> 선택적 지출심사는 다시 심사 주제에 따라 ① 특정 정부 사업에서 지출절약 요인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심사(Program Review), ② 고등 교육, 기후 관련 정책 등과 같은 특정 정책 주제를 검토하는 정책심사(Policy Area Review), ③ 조달 과정이나 인적자원 관리 운용 등 사업 과정을 심사하는 과정심사(Process Review), ④ 특정 부처·청이나 전체 정부 조직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심사(Agency Review)로 구분된다.



대한 범위 선택은 전략적인 결정으로 정치적·제도적 요인에 따라 국가마다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국제금융위기와 같이 재정 건전화의 시급한 상황에서는 포괄적 지출심사가 유용하게 활용되었다(네덜란드, 영국 등). 반면, 심사의 목적이 주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둔 경우에는 선택적 지출심사를 점차 많이 도입해왔다(덴마크).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여러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 다수의 지출심사 방식을 조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림 2〉 OECD 국가의 지출심사제도 변천



주: CER(Comprehensive Expenditure Review), CSR(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CRPR(Comprehensive Review of Public Resources), GRPP(General Review of Public Policies)

자료: IMF(2022), 「How to Design and Institutionalize Spending Review」, p.4

## 지출심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재정당국의 역할에 따라 지출심사는 상향식 심사, 하향식 심사, 결합심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상향식 심사(Bottom-up)는 지출부처가, 하향식 심사(Top-down)는 재무부 등 재정당국이 지출심사의 권한을 갖는 방식이다. 결합심사 방식(Joint Review)은 지출부처와 재무부가 지출심사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절충된 방식으로, 모든 관계 기관이 심사 과정에 밀접하게 참여하기에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이다.

한편, 잘 조직된 거버넌스(Governance Framework)는 지출심사에 도움이 된다. 〈그림 3〉은 지출심사를 위한 조직구조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출심사에 필요한 주요 요소로

지출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사무국, 지출 팀 등을 제시했다. ‘지출심의위원회’는 지출심사의 범위, 목표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로, 위원장의 연공서열이 높을수록 지출심사 수행에 도움이 된다. ‘조정위원회’는 지출심사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팀 내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사무국’은 방법론 및 결과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지출심사팀’은 실질적인 분석 수행을 담당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지출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때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구성된 ‘독립적인 전문가’의 전문지식은 내부 지식과 결합해 지출심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는 분석적 의견을 보태어 줄 뿐만 아니라 행정부 내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3〉 지출심사를 위한 조직구조 예시



자료: IMF(2022), 「How to Design and Institutionalize Spending Review」, p.5

지출심사의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목표 및 프레임워크 설정 단계로 지출심사 전반에 활용되는 주요 요소가 결정되는 단계다. 지출심사의 목적, 검토 범위, 대상, 일정 등에 관한 사항들이 여기서 결정된다. 2단계는 지출분석 및 정책옵션(Policy Option) 설정 단계로, 우선순위가 낮거나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지출을 식별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단계다. 지출분석은 프로그램 및 정책이 얼마나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일치하는가(적합성), 의도한 목표와는 얼마나 부합하는가(효과성), 적은 투입으로 얼마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효과성 또는 비용효율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진다<sup>2</sup>. 심도 있는 지출분석을 통해 정책옵션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출심사의 핵심 업무이자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으로, 정책옵션의 비용과 영향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산출

<sup>2</sup> 지출심사의 목적과 다루는 주제에 따라 예산 기준선 분석, 투입 및 추세분석, 지출 효율성·효과성 평가, 데이터의 국가 간 비교의 기준점 설정(Benchmark) 등 다양한 분석 방식이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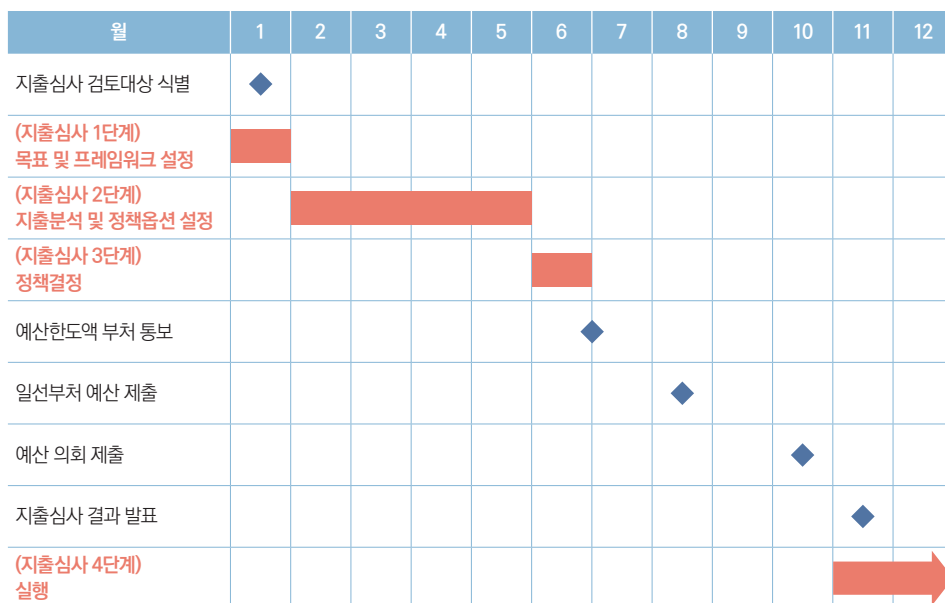
물인 지출심사보고서는 지출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최종 의사결정자가 고려할 정책옵션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3</sup>. 다음 3단계는 최종 의사결정자가 제안된 정책을 예산 및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Framework)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심사숙고하고 결정하는 정책결정 단계다. 검토 범위에 따라 2~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 마지막 4단계는 실행 및 모니터링 단계로 논의된 조치가 잘 실행되고 예상 결과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다. 지출심사보고서나 정부가 채택한 제안은 투명성 증진을 위해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 위원회나 의회와 같은 독립적 재정기구가 모니터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지출심사의 제도화 권고

지출심사를 정규 예산 과정과 통합하는 경우 프로그램 성과와 재정지출의 적정성을 고려한 예산 배분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출심사 목표를 정부의 중기재정 목표와도 일치시킬 수 있다. 예산 순기를 고려한 지출심사의 일정을 보여주는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지출심사의 3단계(설정-정책옵션 설정-정책결정)를 통한 지출심사 결과는 부처별 중기 지출 한도 및 기관 예산에 반영된다.

이처럼 지출심사를 예산과정과 통합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 PFM) 관련 법률에 주기적 지출심사를 요건으로 포함시키거나, 보조 규정이나 지침을 통해 지출심사 절차를 공식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림 4> 지출심사 및 예산 준비를 위한 일정표



자료: IMF(2022), 「How to Design and Institutionalize Spending Review」, p.14

다만 지출심사는 재정지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능력과 정책도구, 성과정보 등이 수반되는 까다로운 작업이다. 분석뿐 아니라 관련 부처, 이해관계자, 정부 등과의 의견 조정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포괄적 지출심사의 경우에는 부처 내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더라도 1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출심사의 본격적 도입에 앞서 일부 영역에 대해 시범사업(Pilot)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대상 범위는 포괄적이기보다는 부처, 또는 부처 내 정책 영역에 한정하여 집중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좋다.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지출부처의 참여 인센티브, 분석 역량을 갖춘 범위로 선택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

## 공공재정관리(PFM)의 개혁 지원 및 지출심사 역량 강화 권고

지출심사에는 잘 정립된 공공재정관리(PFM) 시스템을 비롯해 재무부와 지출부처의 수준 높은 분석역량이 요구된다. 공공재정관리 시스템 구축과 지출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연간 예산 과정, 중기재정 체계, 재무·비재무 성과정보, 분석 역량, 지출 우선순위 메커니즘(Mechanism), 충분한 시간 등의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편, 지출심사를 제도화하거나 지출심사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지출심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 성공적인 지출심사제도의 요건

- 지출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책임감(Ownership)과 정치적 의지(Political Commitment)를 지닌다.
- 지출심사의 시작 단계에서 전략적 목표와 절감 목표(Saving Target)를 분명히 설정한다.
- 검토기준, 템플릿, 지침 등을 사용함으로써 정책 옵션의 비교분석을 용이하게 한다.
- 지출심사의 주요 역할, 의사결정 방안 등을 결정하고 지출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안정적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다.
- 단기적으로 예산을 절약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결정을 피하기 위해 중기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 지출심사를 정규 예산 과정과 통합함으로써 지출심사 결정이 중기지출 상한선에 반영되도록 한다.
- 실현 가능한 실행계획 개발과 지출심사 결정사항 이행 모니터링 등 지출심사의 실행 단계에 중점을 둔다.

3 지출심사 보고서는 분석 개요, 최근 지출 추세, 핵심 요소 및 향후 지출 압박 요인, 지출심사 제안의 세부사항, 중기예산 영향, 경제·사회적 영향 등, 실행 시 문제점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장애를 딛고 어린 시절 꿈을 찾게 해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2022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작 최우수상



제 어린 시절은 맛별이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텅 빈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당시 살고 있던 부천시에는 부천시립교향악단이 창단되어 시에 음악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고 저 또한 시에서 진행되는 공교육을 통해 바이올린을 배우며 음악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악기를 배우고 있었지만, 재능을 인정받아 전공을 권유받았을 때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오래 다니던 회사를 실직하시어 바이올린 전공의 꿈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뒤 IMF 사태로 상황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음악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가진 것이 없던 저는 성공을 하기 위해 중교 시절 권투선수를 준비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의 영향으로 한국권투계도 어려움을 겪었고 저는 머리에 후유증만 남긴 채 권투를 그만두고 건설 현

장과 같은 곳에서 육체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땀벌에서 일하여 자주 열사병 증상을 겪었고, 권투하던 시절에 생긴 머리 후유증이 겹쳐 건강을 발목 잡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머리에 문제가 생겨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어느 정도 재활이 잘 되어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취업과 같은 사회생활의 진입에는 일반인들보다 불리한 점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이 불리한 상황에서 오히려 어린 시절 꿈인 음악을 다시 제대로 시작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여, 어려운 몸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며 음대와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 후 저는 바이올린 비올라 연주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불리한 신체적 조건과 음악을 늦게 시작했다는 점, 좋은 학교 출신도 아니었기에 안정적인 시립이나 도립 교향악단에 들어가지 못했



지만 여기저기 연주 기회만 있으면 지방공연과 같은 열악한 무대라도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수입도 부족하고 불안한 상태였지만 음악에 대한 꿈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공연은 취소되어버렸고 공연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모든 연주활동이 중단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우연히 e나라도움을 통해 예술 분야 공모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문화부 산하기관의 예술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모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중고교 시절 권투선수를 준비하느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 아는 것도 없었고 사회에 나와서도 건설 현장 육체노동만 하여 세상에 대한 지식도 없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저는 컴퓨터도 잘하지 못하고 행정에 대해서도 잘 몰라 공모사업에 합격해 놓고도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e나라도움은 그런 저에게 오히려 심적 안정이 돼주었습니다. 유튜브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의 사용법을 자세하게 보고 들을 수 있었으며, 간혹 이해 안 가는 점이 있으면 전화상담을 통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공모사업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저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 부담이었는데 e나라도움 시스템은 저에게 정말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공모 신청, 사업 등록, 집행 등록, 이체 등 업무를 집에서 손쉽게 편하게 처리할 수 있었고, 일에만 집중해 예술 공모사업을 통한 음악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나라도움을 통해 바로 이체를 할 수 있는 점도 너무 편했고, 증빙서류도 바로 등록할 수 있는 점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 너무나 구세주와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력이 중단된 다른 음악인들과는 달리,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사업으로 경력 중단은커녕 남들이 이뤄내지 못

한 성과와 포트폴리오가 남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시기 이전에는 남들보다 불리한 출신과 장애로 인해 힘들게 예술 활동을 했지만 오히려 역전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e나라도움과 함께 한 공모사업의 경력으로 인해 코로나19 기간 한국음악협회의 예술인 인력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발판이 되기도 했으며, 중단되지 않은 경력과 성과로 UN 국제음악제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갖고 있던 음악의 꿈이 결국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인하여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2021년 저는 더 큰 공모사업인 국제교류 지원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전년도 경험의 밑바탕이 되어 선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국제교류 지원 사업 또한 e나라도움을 통하여 진행하였는데 전년 대비 늘어난 예산과 규모로 인해 선정되기 힘들 뻔했지만 전년에 비해 더 사용이 손쉬워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인해 공모사업에만 집중하여 교부 신청부터 정산까지 마음 놓고 편하게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e나라도움시스템과 함께하면서 지속적인 음악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불리한 요건 속에서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국제교류 지원 사업을 e나라도움으로 진행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상향된 지원금으로 우크라이나 연주자와 러시아 연주자를 초청하여 화해와 평화의 교류 사업인 정동 국제음악제를 개최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참신한 기획이라 평가받아 각계각층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게 e나라도움시스템이 없었다면 장애인의 몸으로 이런 큰 예술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나라도움을 통해 각 분야에 재능 있는 개인과 단체가 발굴되어 더 많은 결실을 꽃피우는 계기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 미래를 위한 교육, 그 든든한 초석을 세우다

## Interview

교육부 예산담당관



(왼쪽부터) 조정휘, 유수민, 권지영, 이보배

2023년 교육부는 교육개혁 실현을 목표로 주요 추진과제 해결을 위해 역대 최대인 102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같은 예산 증액의 중심에 우리나라 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및 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이 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양성하는 교육, 그 든든한 초석을 세우고 있는 교육부 예산담당관을 찾아가 보았다.

글: 송지유 사진: 조병우

### 예산 편성부터 집행·결산까지 총괄

교육부는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2023년을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 자유·창의에 기반해 모두를 키워주는 교육을 목표로, 2023년부터 4대 개혁 분야, 10대 핵심 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인 102조원 규모를 편성했다. 바로 이 예산 편성의 설계도를 그린 부서가 ‘예산담당관’이다.

“예산담당관 부서는 예산관련 총괄부서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한 내역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는 결산까지 세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

예산 편성과 2023년 예산 집행, 2022년 집행했던 예산에 대한 결산 업무까지 3개년에 걸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을 이끌고 있는 권지영 과장은 12명의 직원이 예산·결산 및 집행 분야로 나누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를 이어갔다. 예산 관련 업무인 만큼 업무의 부담과 주목도가 높은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음 연도의 밑그림을 그리는 편성 업무는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만큼 쟁점도 많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의 어려움도 더 크다고 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부터 초·중·고등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 교육을 아우르는 부처로 이해관계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 정책 대상들과 협업해

“  
예산담당관 부서는 예산관련 총괄부서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한 내역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는 결산까지  
세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재정 STORY

### 이달의 재정 이야기

서 정책을 만들어가고 정책의 재정적인 부분을 뒷받침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 점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기재부와 협력뿐만 아니라 국회도 설득해야 하고 다양한 관계자들과 협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준비를 하고 있는 편성업무 담당자 유수민 사무관은 특히 수많은 관계자들과 함께 협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 대학 혁신의 마중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교육부의 예산 편성 방향은 궁극적으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 목적과 그 방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투입 성과 창출의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재정당국·국회 등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 예산 담당관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지영 과장의 설명처럼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23년 교육부 예산은 2023년 정부 전체 예산의

약 16% 정도를 차지하며, 정부 부처 중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 교육부 예산은 크게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 고등 교육 분야 및 평생·직업 교육 분야에 집행된다. 특히 이번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이 큰 이슈가 되었다. 유·초·중등 부분에 지원되던 재원 중 일부를 고등교육 재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특별회계 신설의 가장 큰 변화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교육비(2019년 기준)는 초·중등 교육의 경우 OECD 평균 대비 141.8%에 이르지만, 고등교육 1인당 교육비는 64.3%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요. 때문에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학의 혁신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권지영 과장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확충된 재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을 지역 혁신의 허브로 집중 육성하며,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을 갖춘 글로컬(Glocal) 대학도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미래 첨단 분야 연구개발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유보통합 및 늘봄학교 추진 등 10대 교육과제를 설정했다. 더불어 항공·우주,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및 환경·에너지 5대 분야를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재 양성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해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 미래 인재 양성 위한 교육 개혁 추진의 원동력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비롯해 예산집행 심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며, 단 한 푼도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조정휘 사무관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1년 동안 사업의 성과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 자율평가위원회에서 세밀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 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국민들께서도 궁금하시겠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회, 한국재정정보원 등 정말 많은 분들이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켜보십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고 있



“

재정 투입이 성과 창출의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재정당국·국회 등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 예산 담당관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도 결산을 담당하는 이보배 사무관은 예산 담당관은 교육부의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라고 자부한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전부인 나라인 만큼, 교육부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잘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담당관에서도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력양성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되고 미래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에서는 교육재정이 교육 개혁 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재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더욱 단단한 의지를 다졌다.

\* 교육부 홈페이지-재정·예산에서 예산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에서도 교육부 예산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다.

##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중심이 되다 물의 도시 충주

한반도의 중심 도시인 충주시가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환경부의 '탄소중립 그린도시'로 선정되면서 청정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충주시. 삼국시대의 역사가 배어 있는

용전리 일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충주시로 떠나보자.

글. 송지유 사진. 고인순







### 용전리 일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충주시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청사진을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실시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지역인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일원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정책을 구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되었다.

충주시는 ‘국토의 중심,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중심이 되는 충주’를 목표로 용전리 일원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조성한다. 2023년도에는 설계를 위한 국비 12억원이 포함된 예산 20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6년도까지 최대 400억원의 국비 및 지방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주거·상업·공공 중심의 건물과 도로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지역 대상으로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핵심사업으로는 수소모빌리티 스테이션 조성 등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군집식재숲 조성 등 흡수원 확대, 제로웨이스트 수거시스템 구축 등 자원순환 촉진, 지능형 강우레이더 등 기후변화 적응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등 연계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사업대상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차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 수소파크, 암모니아 수소 상용화로 그린수소 중심도시

용전리 새도시 100만 ㎡에는 수소에너지 기반의 탄소중립 그린도시가 조성된다. 도시 중앙에는 탄소 흡수 수목원, 탄소중립 교육·체험 공간, 탄소중립 시장 등을 갖춘 수소파크(2만 9,374㎡)가 들어선다. 또한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마을과 다세대주택가에 목재 특화 거리(1km)를 조성한다. 자전거 전용

자전거고속도로와 도시 곳곳에 미세먼지 차단 숲도 조성한다. 현재 2곳인 수소충전소도 5곳으로 늘리며, 수소차는 2026년까지 2,000대로 늘리고, 수소버스 8대도 운행할 방침이다.

바이오가스와 암모니아를 활용한 그린수소 공급망도 구축한다. 충주는 매일 음식물 쓰레기 55~60t을 수거·처리해 바이오가스 7,500㎥를 생산한 뒤 정제·압축·고질화 등의 과정을 거쳐 하루 500kg 안팎의 수소(순도 99.995%)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용화할 계획이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수소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를 생산·공급하는 사업으로,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그린수소의 중심도시가 될 것이다. 본 사업 기간은 2026년도까지이나 계획연도는 2030년까지로 하고 있다.

물의 도시 충주가 그린수소 중심도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중심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 중원을 대표하는 중앙탑, 탑평리 칠층석탑

용진리 인근의 탑평리 탄현호변에는 통일신라시대 칠층석탑(국보 제6호)이 자리하고 있다. 이중 기단 위에 쌓은 칠층석탑의 탑신은 높이 14.5m로 통일신라시대 석탑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탑평리 칠층석탑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한다고 하여 ‘중앙탑(中央塔)’이라고도 불린다. 일설에 따르면 신라 38대 왕인 원성왕(785~798년)이 국토의 중앙을 알아보기 위해 남과 북 끝 지점에서 보폭이 똑같은 사람을 한날한시에 출발시켰는데, 두 사람이 칠층석탑 위치에서 만나면서 이곳에 탑을 세우고 중앙임을 표시했다고 하니 충주와 중원을 대표하는 상징물이기도 하다.

수려한 노송이 사방으로 그늘진 구름 위에 높게 세워진 칠층석탑은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데,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중동의 중심이 느껴지는 듯하다. 탑 주변으로 펼쳐진 너른 잔디밭 곳곳에는 다양한 테마의 조각작품들이 늘어서 있다. 석탑 일대가 중앙탑사적공원으로 조성되어 현대와 과거가 어우러진 문화의 향연이 펼쳐진다. 칠층석탑이 조각작품과 어우러져 또 다른 사진 촬영의 명소로도 인기를 모으기도 한다. 공원 옆으로는 남한강 물길이 흐르는데 충주댐과 조정지댐 사이에 위치해 ‘탄금호’라고 부른다. 보기만 해도 싱그러운 탄금호반을 따라 더욱 호젓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호반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탄금호 무지개길로 이어진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빈센조>의 촬영지이기도 한데, 밤이면 무지개길과 석탑 주변에 설치된 조명이 운치 있는 분위기를 더해 야경 명소로도 인기가 높다.

#### Tip

중앙탑사적공원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탑정안길 6 / 043-842-0532

탄금대

충북 충주시 탄금대안길 105 / 043-848-2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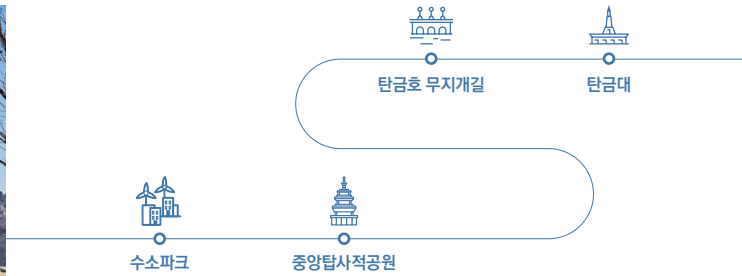


호반길과 공원을 산책하는 내내 어느 곳에서도 보이는 중앙에 우뚝 선 탑평리 칠층석탑이 보여 마치 북극성처럼 이정표가 되어 준다.

#### 역사 문화 유적과 자연공광이 어우러진, 탄금대

탄금호반을 따라 충주를 대표하는 또 다른 명소가 인근에 있다. 장중한 남한강 물줄기가 내려다보이는 대문산 기슭의 탄금대가 바로 그곳이다. 탄금대는 본래 대문산 또는 견문산이라 불리던 작은 산으로, 그 아래로 남한강과 달천이 합류한다.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물이 기암절벽을 휘감아 돌고, 절벽 위 울창한 소나무가 어우러져 빛어내는 경치 또한 빼어난 곳이다. 바로 이곳에서 신라 진흥왕 때 악성(樂聖) 우륵(于勒)이 가야금(琴)을 연주(彈)하였다 하여 탄금대라고 불리게 됐다. 망국이 된 가야 출신인 우륵이 신라에 정착하면서 진흥왕의 명령으로 이곳 탄금대에서 신라의 악공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쳤다고 한다.

주변 경치가 아름다운만큼 공원으로 단장된 탄금대는 또 다른 사연들도 간직하고 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신립장군이 군사 8,000여 명을 이끌고 왜군과 격전을 벌인 끝에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한 순국의 현장이다. 신립장군 팔천 고훈 위령탑 하단에는 탄금대에서의 치열한 전투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또한 한국전쟁에서 숨겨진 충주 출신 전몰 장병과 경찰관, 군속, 노무자 2,838인의 넋들을 기리는 충혼탑도 공



원 초입에 세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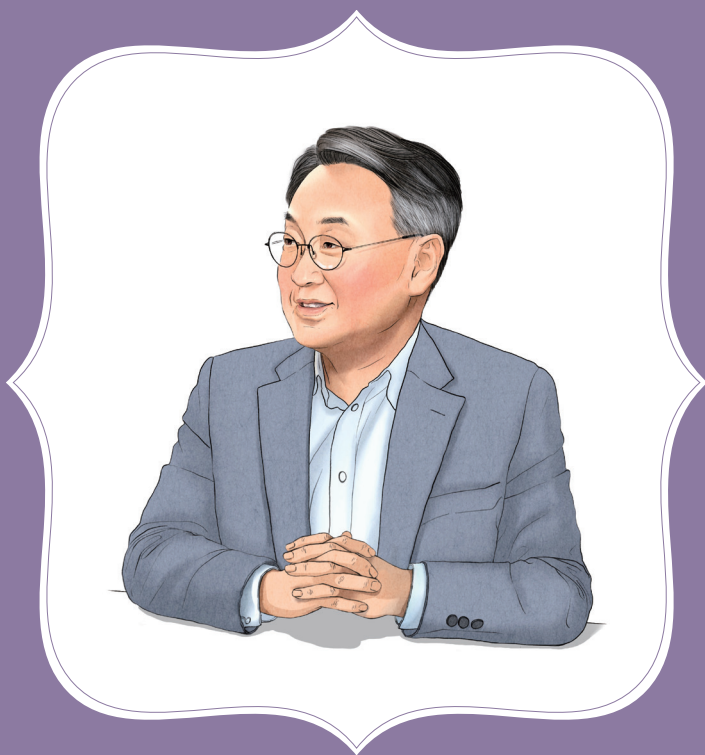
산기슭 일대에 조성된 공원 곳곳에 놓인 조각작품들을 감상하며 소나무 숲길로 접어들면 벼랑 위에 정자 탄금정이 모습을 드러낸다. 탄금정 북쪽으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열두 대라는 층암절벽이 있다. 왜군과의 격전 당시 신립 장군이 열두 번이나 오르내리면서 활줄을 강물에 식히며 병사들을 독려했던 곳이라고 한다.

다시 벼랑을 올라 대항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탄금대비가 우륵과의 사연을 전하고 있다. 저 멀리 충주호쪽에 탄금대에서 울려오는 가야의 소리를 닮은 멋진 3경간 아치교가 보인다. 수려한 자연과 산길 곳곳에 배어 있는 역사를 되새겨보는 봄의 문턱, 벼랑 아래로 도도히 흐르는 남한강 물결 따라 1,500년 전 가야금의 음률이 일렁거리는 듯하다.



## 2023년 경제전망과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 - 유일호 전 부총리 인터뷰 ③

글. 장윤정 일러스트. YRi(@yri\_yul)



[ 편집자 주 ]

〈나라재정〉은 2023년도 신년 기획으로 ‘한국 재정사의 현장’ 연재를 시작합니다. 경제-재정정책 현장의 주역을 담당했던 주인공들을 만나 재정의 현재 모습을 결정지은 제도 변천과 의사결정에 얹힌 이야기를 들어보고,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자 하시는 말씀도 전합니다. 첫 손님으로는 2016년부터 2017년 중반까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유일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유 교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1월호부터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2024년 이후의 반등을 위해 2023년에 어떤 준비를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질문에 유 전 부총리는 금년도 경제가 금리와 물가 안정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화당국의 입장이 풀리지 않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국은행도 대외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가야 될 것이라고 추측되고, 가계부채 측면에서는 나라 경제가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요?”

12월 중순에 이뤄진 인터뷰 이후 미국 연준은 두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한국은행도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미국을 포함하여 대외 금리가 인상되면 국내에 투자되어 있거나 투자를 고려하던 금융자본이 금리가 높은 해외로 빠져나갈 유인이 커지게 된다. 이로 인해 원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실물경기의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미국 연방은행보다 너무 낮지 않게 유지하고자 하게 된다.

“물가 안정과 저성장 타개는 정말 거시경제적 문제인데, 수요 측면의 대외요인인 에너지 가격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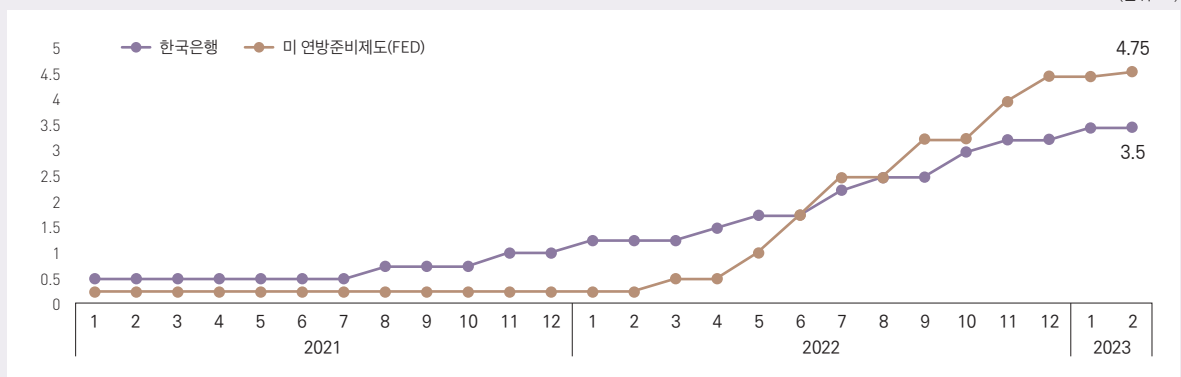
승 때문에 현재 우리 물가가 코어 인플레이션(물가안정목표) 바깥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것을 겨냥한 대책이 나오고 있으니 잘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대책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 시그널을 주는 것이 결국 경기 불황의 방향을 바라보는 게 될 수 있고, 저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이니까 만약 그렇게 전개된다면 경제가 매우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23년을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단기적 어려움은 안타깝게도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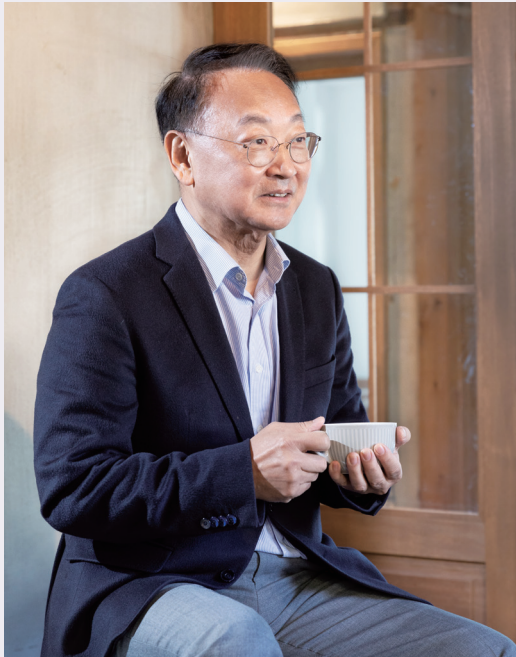
한편 기재부 장관 이전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역임 하였던 그는 부동산 시장에 의한 가계부채 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게 바라봤다.

“부동산 시장에 의해서 가계부채가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고 제가 보기에 그렇기라고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정책당국이 나름대로 촘촘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가계빚이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니까, 우리 경제의 주름살이 거기서부터 오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주택정책도

〈그림〉 한미 기준금리 추이

(단위: %)





그다지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다각도의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즉, 단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잘 이뤄지면 2024년의 경기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기적으로 재정정책 측면에서의 주된 과제는 무엇으로 꼽고 있는지 질문했다.

“일단 지금 당장 재정에서 중요한 것은, 재정의 건전화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설령 단기간 내 건전화가 달성되긴 어려운 상황에 와있는지 몰라도 지금 현 재정당국이 방향을 그리 잡은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책현장의 후배들에게도 재정준칙 입법화를 비롯해 관련된 정책과제들을 열심히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연금개혁 문제는 기대가 되는 한편 걱정도 되는데, 참 쉽지 않지만 더 내고 덜 받는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지요. 그나마 평균수명 자체가 늘어났다는 것을 기회요인으로

보아서, 정년을 좀 더 늦춰서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뒤로 더 미루더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연금재정에 기여하게 해주면, 국민들에게도 받아들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후배들이)잘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월 말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는 국민연금 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해, 2055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의 가입 및 수급 연령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이 70년 후에도 당해 지출될 연금만큼의 적립금을 연초에 확보하려면 현행 9%의 보험료율이 2025년 17.86%로 인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할 최종 결과는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뒤이어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경제정책 과제로 장기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을 꼽았다.

“거시경제 환경 변화로 오는 저성장 문제는 지금 같은 경우 다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타개될 수 있을 것인데 반면에 규제라든가 노동구조같이 성장잠재력을 장기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들도 산적해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모두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김대중 정부가 당연히 외환위기를 벗어나야만 하는 상황에서 성장 친화적 정책을 폈고, 최근의 문재인 정부도, 성패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저 성장을 타개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했던 말이지요. 그런데도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것을 보면, 결국 왕도는 없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경제 구조개혁의 방안과 주력 과제로 생각이 미치자 그는 규제와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 방안이야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할 필요 없겠지만 결국 규제, 노동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도 있고, 빅데이터와 4차 혁명 시대를 기회 삼아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선도할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장이 할 일도 많은데 앞서 언급한 노동과 규제개혁 이런 쪽에 정부 역할의 비중이 더 클 수 있어요. 규제개혁도 말아야 쉽지, 쉬운 일은 아니고... 노동개혁도 반드시 해야겠지만 상대가 워낙 분명한 일이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어렵더라도 해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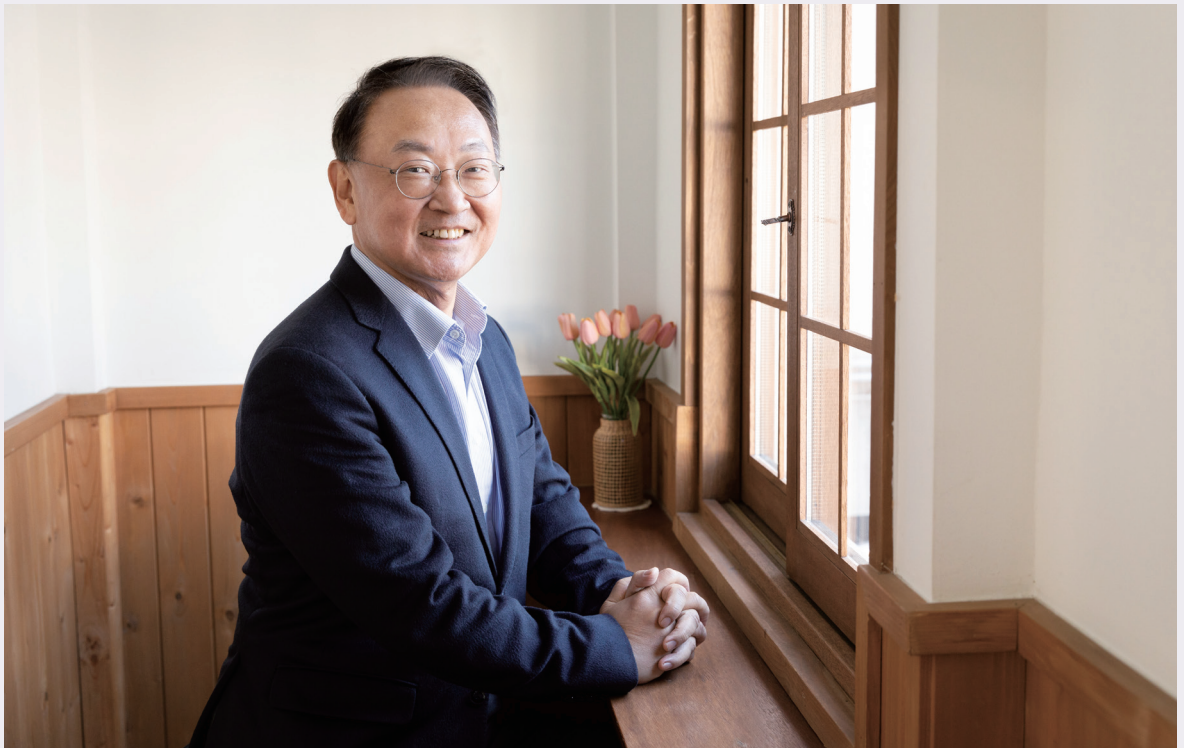
그는 어렵더라도, 꼭 해야 한다는 점을 힘주어 재차 강조했다. 예상보다 장시간 이어진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나라재정> 독자들에게 한 말씀을 부탁했다.

“재정이 자기한테 와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고, 관심도 없고, 좀 어려우니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한데, <나라재정>을 읽으시는 일반 국민들이 국가 살림살이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서 재정정책의 변화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는 분명 우리 경제를 한 단계 탄탄히 다진 데 기여한 인물이다. 그가 재임하던 2016년 9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로 상향 조정했고, 이 신용등급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선 호에 실은 바처럼, 공공부문 부채는 재임 시절 감소하기도 했다.

곧 칠순을 바라보는 연륜을 지녔음에도,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그의 얼굴에서 소년 같은 순수함과 청년 학자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학계, 정계, 관계 모두에서 최고의 위치를 석권한 당대의 인물답게 지난날의 자신에 떳떳하고, 그럼으로써 여전히 기대에 찬 시선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에 느껴지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보다 많은 공직자들이 그와 같은 면모를 갖추어 우리나라의 앞날을 멋지게 꾸려가기를 소망해 보며 연재를 마친다.



## 채권의 발달은 전쟁 때문이었다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



필요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교적 장기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쉽게 표현하자면, 돈을 빌릴 때 언제까지 자금을 사용하다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줄 것임을 표시한 일종의 차용증서가 채권인 것이다. 이런 채권의 탄생은 자금 공급 조달 측면에서는 일종의 혁명이었다. 은행 대출 이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공해 줬기 때문이다.

채권은 오늘날 주식과 함께 가장 일반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자 일상적인 금융투자상품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채권과 주식은 다양한 측면에서 상반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률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자금을 투자하여 주식회사를 차리는 행위를 국가가 별도로 관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주식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인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에 준하는 절차만 거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채

권은 다르다. 채권의 발행 주체 및 한도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진다. 국채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있어야 하며, 회사채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와 간이사업설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발행이 가능하다. 만약 금융위원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채발행을 위한 청약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비사업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식과 채권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주식은 일반적으로 회사만 발행이 가능한 데 반해 채권은 회사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등이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하고 있는 채권의 대부분은 정부나 지자체 내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들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채권 발행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세금으로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있음에도 말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전쟁' 때문이다. 전쟁을 치르는 중에는 군비 조달 등에 막대한 추가비용이 유발된다. 하지만 세금은 일상적인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또한 세금이란 일단 국가에 내고 나면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전쟁에 대한 국민적 동의마저 얻기 어려



위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은 다르다. 채권 발행으로 군자금을 조달하면 전쟁 수행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역시 국가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자금 모집도 용이하다. 국가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많은 전리품을 얻기 때문에 이들 전리품을 이용해 채권을 갚을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전쟁 시 세금보다 채권 발행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많은 역사적 현장 속에서 전쟁 수행 시 채권을 발행한 사례를 흔히 목격할 수 있다.

14~15세기 중세 이탈리아 도시인 피렌체, 피사, 시에나와 같은 국가는 서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 기록이 있다. 당시 이들 도시국가는 자국 시민만으로는 온전한 군대를 조성할 수 없어 용병을 고용해야 했다. 하지만 자국민의 의무 징집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는 달리 용병을 이용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당시 사료에 따르면, 15세기 초 피렌체의 차입금 규모는 1년 세입 규모의 70%에 달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그렇다면 해당 국가들은 어떻게 해서 막대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었을까? 피렌체를 비롯한 여타 도시국가들은 채권을 발행해 용병 고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 당시 피렌체 전체 가구의 3분의 2 정도가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구입했다고 한다. 피렌체를 비롯한 여타 도시 국가들은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채권 구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 주었다. 먼저 주민들이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을 구입할 경우 재산세 납부를 면제받게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을 구입하면

그 대가로 일정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 주었다. 즉, 채권을 구매하는 것은 세금 감면 효과뿐만 아니라 이자 수익도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경제 활동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금쪽 같은 자금을 흔쾌히 빌려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국가가 요청할 경우 국채 매입을 통해 자금을 빌려주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법으로 규정한 의무였기 때문이다. 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다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제도적 유인과 강제성을 제공하여 당시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은 전쟁 수행 시 필요한 자금을 채권 발행을 통해 쉽게 조달할 수 있었다. 17세기 암스테르담은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 여러 국가에서 발행한 다양한 채권 거래소

“  
채권 발행으로 군자금을 조달하면  
전쟁 수행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역시 국가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자금 모집도 용이하다.  
”





기능을 수행하면서 유럽의 금융 중심지로 부상했으며, 18세기에는 세계 최고의 금융 재벌 가문으로 부상한 로스차일드 가문이 군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된 영국 채권 매매에 참여하면서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까지 세계 금융시장에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영국에 거주하던 로스차일드 가문은 금 밀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영국의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유럽 대륙에 영국 봉쇄령을 내려 영국과의 교역을 중단시켰다. 공식적인 교역이 차단된 당시 영국과 유럽 사이에는 밀수가 성행했고, 이 과정에서 대금 결제 역시 금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때 금괴 밀수 등을 수행한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이다.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이 본격화되자, 영국은 전쟁에 필요한 여러 군수 물자들을 유럽 각지로부터 구입해야 했다. 하지만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영국 화폐로 대금을 결제 받길 원하지 않았다. 영국이 전쟁에 질 경우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을 영국 화폐의 가치를 믿고 물건을 공급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은 군수 물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금으로 결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막대한 자금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때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러한 금괴 수급을 거의 전담하면서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당시 영국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일하게 금괴를 밀수한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로스차일드 가문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상황이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 각지에서 금괴를 조달하는 업무와 영국 정부에 군수물자를 제공한 유럽 각지의 상인들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누구보다 전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었다. 영국이 워털루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전쟁이 끝날 것을 간파한 로스차일드 집안은 채권시장에서 대규모 투기를 감행한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자신들이 그동안 벌어들인 재산을 영국 국채를 매입하는 데 대규모 투입한다. 결국 전쟁이 끝나고 나면, 영국 정부도 채권을 발행해 무리한 차입을 지속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며,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지면서 이 과정에서 영국 채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1815년부터 영국 국채를 대규모 매입한 로스차일드 가문이 자신들이 보유한 영국 국채를 1817년 다시 매각할 때는 채권 가격이 40% 이상 오른 상태였다. 세계적인 경제사학자이자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은 당시 로스차일드 가문이 채권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이 6억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조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남북전쟁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남북전쟁 당시 남부와 북부 모두 막대한 군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그런데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집적화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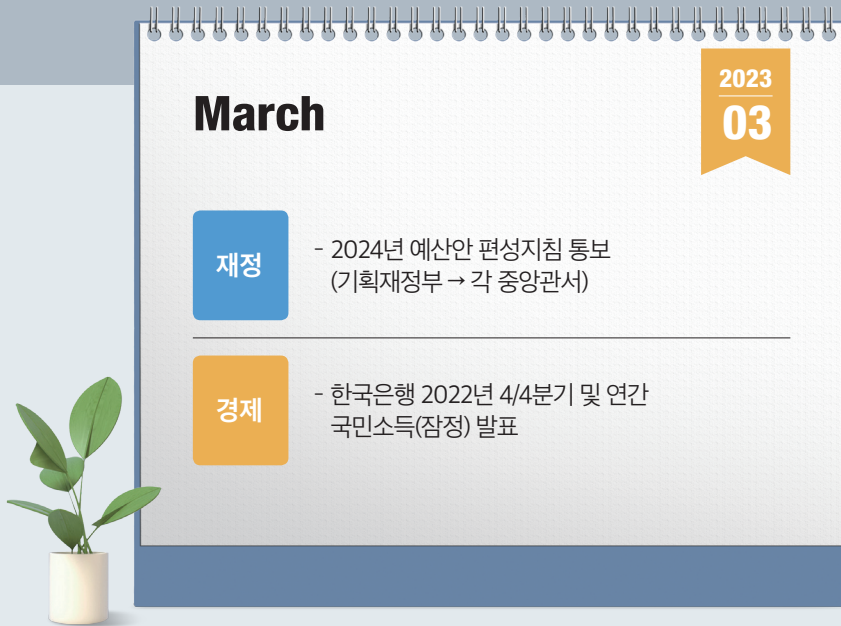
중심으로 발전했던 북부는 중앙 집중화된 세금 징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던 남부는 이러한 조세 징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 결국 남부는 군자금 조달할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역시 이때도 결론은 채권이였다. 하지만 남부에서 발행할 채권을 대규모로 구매해 줄 구매력을 갖춘 집단은 남부 내부에선 존재하지 않았다. 농장 운영을 중심으로 자금자족 형태의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남부 유럽인들에게 눈을 돌렸지만 유럽인 역시 전쟁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남부의 채권을 쉽게 매입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부 측은 전쟁에 필요한 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신들의 면화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많은 유럽인은 미국에서의 전쟁으로 인해 면화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남부에서 발행한 채권에 적극 투자했다. 하지만 전쟁 과정에서 북부군이 남부 측의 면화 생산 지역과 이를 수출하는 항구 등을 점령하자마자, 전쟁은 북군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졌다. 남부에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한 많은 유럽인은 이자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받기로 한 면화를 제대로 수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유럽인들이 남부에서 발행한 채권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았으며, 결국 남부 측은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채권 발행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급하지 못했고, 결국 전쟁에서의 패배로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나열한 바와 같이, 오늘날 대표적인 금

융투자 상품인 채권은 전쟁을 통해서 대중화되었고, 매매 형태나 거래 방식이 고도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많은 국가들이 채권을 원활히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자 지급 방식과 채권 발행 시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고안되었다.

오늘날에도 채권 발행의 주체는 단연 국가이다. 물론 오늘날에는 전쟁을 위한 군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지는 않는다. 대신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권시장은 해당 국가의 주식시장에 비해 훨씬 큰 규모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5년 기준 채권시장의 시가총액은 1,780조원인 데 비해,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이보다 작은 1,404조원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역시 1950년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 아래 건국 국채가 최초로 발행된 이래, 지금도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채권들을 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공익적인 목적 아래 사회적 필요성이 확인될 때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채권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다. 전쟁이라는 가장 참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발전해 왔던 채권이 오늘날에는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변화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 외환제도 개편방향 발표 (기재부, 2.10.)

- 「외국환거래법」 제정(1999년) 이후 외환거래 수요가 확대된 상황에서 과도한 외환 규제가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야기
- 이에 따라 건실한 대외 부문의 위기대응 역량을 감안할 때, 외자유출 통제 위주의 제도에서 탈피할 필요성 대두
- 선진적 외환제도로의 전환을 최종 목표로, 대내·외 경제 여건, 입법화 절차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1단계) 시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업무영역 관련 규제 우선 혁파
  - (2단계)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전면 개편,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진



## 2022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통계청, 2.23.)

- 2022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64만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
- 2022년 소비지출 비목별 비중은 음식·숙박(15.0%), 식료품·비주류음료(14.8%), 교통(12.0%), 주거·수도·광열(11.5%) 순임

##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 (한국은행, 2.23.)

-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중 부진한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 등 회복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
  - 경제성장률은 금년과 내년 중 전년 대비 각각 1.6%, 2.4%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 2.6%로 전망되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60억달러(GDP 대비 1% 중반), 480억달러(2% 중반)를 기록할 전망



## JANUARY

01

## 재정

- 2024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2022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

## 경제

- 통계청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FEBRUARY

02

## 재정

- 2022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2022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경제

- 한국은행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발표

## MARCH

03

## 재정

-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 경제

- 한국은행 2022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 APRIL

04

## 재정

- 2022년 결산검사 의뢰 (기획재정부 → 감사원)

## 경제

- 2022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발표

## 국제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 MAY

05

## 재정

- 2024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2022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 → 국회)
- 2022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2022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경제

- 통계청 2023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 통계청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JUNE

06

## 경제

- 한국은행 2023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기획재정부 2023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 JULY

07

## 재정

- 2023년 세제개편안 발표

## 경제

- 통계청 2023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 통계청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발표

## AUGUST

08

## 재정

-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 2023~2027년 중기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확정

## 경제

- 통계청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SEPTEMBER

09

## 재정

- 2024년 예산안 제출(정부 → 국회)
-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 경제

- 한국은행 2023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 OCTOBER

10

## 경제

- 한국은행 2022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 발표

## 국제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 NOVEMBER

11

## 경제

- 통계청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국제

-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 DECEMBER

12

## 재정

- 2024년 예산 확정

## 경제

- 기획재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2023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월간 <나라재정> 정기구독 신청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월간 <나라재정>은 구독 신청 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R 코드로 접속해  
신청해 주세요.



# 애독자 코너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애독자 QUIZ

퀴즈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문  
제

이것은 교육재정 내의 불균형한 재정투자 상황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교육 재정 배분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신설된 특별회계를 말한다. 기존 유초중등에 지원되던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일부를 고등교육 재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골자인 이 특별회계의 명칭은?

답

특별회계

## 독자편지

월간 <나라재정>을 즐겁게 읽으셨다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페이지의 간단한 느낀 점을 적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010-\*\*\*\*-491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복식부기에 대해 개성상인의 사례를 통해 알려주시니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조선시대부터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경영을 수행한 개성상인들에게 감탄을 금치 못하네요. 선조의 지혜를 닮고 싶은 요즘입니다.

애독자 퀴즈 정답 & 독자편지 보내주실 곳

★ 응모 기간 2023. 3. 21. ~ 2023. 3. 31.



QR 코드로 접속해  
응모해 주세요.

지난 호 이벤트 당첨자

010-\*\*\*\*-413

010-\*\*\*\*-272

010-\*\*\*\*-318

010-\*\*\*\*-206

010-\*\*\*\*-070

010-\*\*\*\*-350

010-\*\*\*\*-491

010-\*\*\*\*-422

010-\*\*\*\*-498

010-\*\*\*\*-690



괜찮아,  
다 잘될 거야!  
덕분에,  
오늘 이식을 받아요.

매년 약 1,000여 명의 아이들이 소아암 진단을 받습니다.  
한국소아암재단은 모든 소아암 환아가 새 생명을 얻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배우고 성장하여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투병 중인 어린이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백만 천사가 되어주세요.



(재)한국소아암재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받고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병 어린이 및 가족들을 돕는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후원 문의

02-3675-1145~6



이메일

soaam9191@naver.com



계좌번호

국민은행 060401-04-025956 (재)한국소아암재단

본 광고는 한국재정정보원 후원으로 진행되는 (재)한국소아암재단 무료 광고입니다.